

中國의 改革・開放

— 東北亞情勢 및 韓半島 統一에 미치는 影響을 중심으로 —

1993年度 韓・中 Workshop 發表論文集

1993. 6. 29 ~ 30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I. 開會辭	李 秉 龍
II. 第1會議：중국의 개혁·개방：문제점과 전망	
○ 兪 曉 秋	1
○ 崔 春 欽	7
III. 第2會議：중국의 개혁·개방과 동북아정세	
○ 陳 莊	35
○ 申 相 振	45
IV. 第3會議：중국의 개혁·개방과 통일문제	
○ 程 玉 洁	63
○ 文 興 鎬	69
〈附錄〉會議 概要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側 發表原文	
○ 兪 曉 秋	99
○ 陳 莊	115
○ 程 玉 洁	123

開 會 辭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과 현대국제관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韓·中 Workshop에 참여하여 주신 徐 淡 부소장님을 비롯한 세분 학자,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中國은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과정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동북아의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 가능성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중·대만관계와 중·북한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중국의 통일과 한반도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동북아질서를 전망하는 Workshop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논문발표와 토론과정에서 제기되는 고견은 저희 연구원 뿐만 아니라 大韓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의 중·장기 정책수립에도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Workshop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간단하나마 개회의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993. 6. 29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中國의 改革·開放 : 經濟와 政治

(요약본)

俞曉秋
副秘書長
對外政策研究中心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1992년 1월 鄧小平은 南巡講話를 통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14全大會 政治報告에서 江澤民총서기는 등소평이 제시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혁·개방정책의 향후 목표로 설정하였다. 李鵬총리 역시 1993년 3월의 8기 全人大 政府工作報告를 통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행정관리체제 및 정부기구의 개혁 방침을 천명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새로운 발전과 향후 추이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 서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들의 정치관계, 경제협력 및 안보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 改革·開放의 理論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정치·문화 등의 변혁을 수반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이론과 정책을 통하여 변혁의 방향·절차·속도·방식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덩소평의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사상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덩소평의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추진과정 및 특성,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덩소평이 제시한 이론의 핵심은 思想解放, 實事求是를 강조하고 중국의 歷史·國情 및 구체적인 실제 문제에서 출발하여 창조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개방, 현대화 과정에서 「하나의 중심」과 「두개의 기본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시장경제 모델로서 개혁·개방 및 현대화 이론·실천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① 소련식 모델을 모방한 전통적인 計劃經濟體制를 철저히 포기한다. ② 國際經濟에 참여하여 중국경제를 세계경제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 전환한다. ③ 사회주의는 市場經濟와 결합될 수 있다. ④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思想과 過程은 財產權關係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行政干與를 축소하고, 價格統制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市場競爭을 장려한다.

II. 經濟改革과 對外開放의 새로운 局面

1978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1979년~1992년의 13년간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1978~1987년 10년간의 성장속도가 가장 높았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심화되면서 所有制構造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으며 현재 중국경제에는 8개의 경제형식이 존재한다. 즉 國有經濟, 集體經濟, 私營經濟, 個體經濟, 聯營經濟, 株式制經濟, 外國企業投資經濟, 홍콩 마카오 대만기업의 투자 경제가 존재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3개 發展段階를 밟아 왔다. 우선 농업에서 시작하여 기존의 농촌경제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聯產責任制 도입, 다양한 경영방식 허용, 鄉鎮企業 육성 등을 통해 農·工·商의 종합적인 서비스체제를 확립하였다. 동시에 남부 연안지역에 선별적으로 經濟特區를 설립하여 대외개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1984년을 기점으로 개혁·개방정책은 2단계에 진입하였다. 주로 都市工業經濟 관리체제의 개혁을 통해 請負經營責任制를 실시, 기업의 自主權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의 指令性 計劃의 범위를 축소하고 시장조절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14개 沿海都市를 개방하고 연해지구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현재 중국경제는 제3단계에 진입하였다. 제3단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립을 기본 목표로 철저히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극히 중요한 단계이다. 3단계의 주요 목표는 市場經濟 건립, 全方位 대외개방, 國際競爭 및 地域合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세계경제와의 접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Ⅲ. 政治改革과 社會的 安定

중국의 개혁·개방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동안 중국이 政治·社會的 安定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질서와 안정은 後發國이 고속경제성장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10여년의 개혁을 통해 중국은 과거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권력이 완전히 중앙으로 집중되었던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이미 기본적으로 개혁하였다. 또한 정치적 안정이 제고되고 정책결정 및 정책변화의 豫測性이 증대되었으며 정책의 持續性 역시 신장되었다.

소위 중국적 특색을 지닌 社會主義 民主政治를 건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民主集中制, 人民代表大會制度, 多黨合作과 政治協商制度, 民族地域의 自治制度, 民主·科學的인 政策決定 제도, 基層의 민주관리 제도 및 전파매체·감독기관·행정검찰기관 위주의 監督制度 등을 기본 요소로 한다.

중국의 정치체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우선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체제개혁·경제발전이라는 두 측면에 착안하여 정치체제개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다. 舊體制에서는 정치·경제·문화·사상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성급하게 추진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 정치체제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여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개혁의 성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국제정치·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달려 있다.

IV. 問題와 展望

과거 14년간 중국의 정치·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덩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전례없는 경제의 고속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정치개혁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일부 문제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농업성장의 둔화, 기초공업의 낙후, 경제성장과 통화팽창간의 모순, 국유기업 개혁의 어려움,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 빈부격차, 국제경제 참여상의 문제점 등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최고 지도부의 세대교체, 부정부패, 중앙과 지방의 관계 및 정부의 權威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중국의 政治民主化와 관련하여 일부 외국의 학자들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지향할 경우 필연적으로 중국의 「自由化」, 「民主化」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소위 民主와 人權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정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정치의 향후 발전 방향은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건립하는 것이며 三權分立式의 서방 議會民主政治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民主社會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

제발전, 法制의 확립, 사회 階層間 流動, 多元化 등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주정치의 體制와 形式은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V. 結 論

그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생활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亞太地域 및 世界經濟 政治發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및 정치체제개혁이 진일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대내외적 변화와 영향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중국이 대외개방의 확대 및 주변 국가들과의 다양한 관계발전, 國際事務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平和 安定과 協力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中國의 改革·開放과 對外政策 展望

崔 春 欽*

◁ 目 次 ▷

- | | |
|-------------------------|-------------------------|
| I. 서 論 | IV. 中國의 對外政策 調整 |
| II. 국제질서 變化에 對한 中國의 인식 | V. 개혁·개방 제약 및 촉진요인 |
| III. 中國의 개혁·개방 政策 | VI. 結 論 |

I. 서 論

中國은 소련 붕괴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 變化에 적응키 위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더욱 深化함으로써 급속한 경제건설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中國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개방의 주요 방향은 중앙통제식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선진국과의 무역·통상, 과학·기술 및 자본도입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中國의 개혁·개방의 심화가 中國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전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소련 붕괴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 變化에 대한 中國의 인식을 분석하고, 둘째, 中國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개방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분석하고, 셋째,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조정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심화에 따라 중국의 대외관계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은 미·소가 구축해 놓은 國際政治·經濟秩序는 이미 붕괴되고 3가지 중요한 현상이 출현하고 있으나, 새로운 국제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향후 국제정세는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다극화 추세

중국은 소련 붕괴이후 양극체제는 붕괴되었으며, 러시아의 위상이 약화되고 미·러간의 지속적인 군축대탕트로¹⁾ 미·러간 전쟁위협이 감소되어 초강대국간의 전쟁발발 위험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정치·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어 국제질서를 불안정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

1) 미·러양국은 1992년 6월 12일~6월 17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1991년 7월 체결된 미·러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보다 더 큰 폭의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이 「制限된 核彈導武器攻擊에 대한 包括的 防禦體制」(Global Protection System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Strike) 構築에 同參하기로 함으로써 安保的 同伴者關係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동 협정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연방은 2003년까지 각각 3,500개와 3,000 수준으로 전략핵탄두 보유수를 줄이게 될 것이다.

국이 무역·통상, 인권개선, 환경문제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역내국가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집단적인 개입을 통해 국제질서 유지를 주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²⁾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대내경제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초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의 유일한 초강대국 위상 유지는 다만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일본·서구의 역할증대로 국제정치질서는 다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³⁾

요컨대, 중국은 향후 국제질서는 미국, 일본, EC를 주축으로 하는 다극화 체제로 정착되고, 동북아질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입지 약화 전망으로 단기적으로는 중·미·일 3각관계로, 장기적으로는 중·미·일·러의 4각관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미·일간의 경쟁관계를 지적하고 있다.⁴⁾

2. 域內紛爭 상존

중국은 소련 붕괴이후에도 역내분쟁은 상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러의 군사적 후퇴로 역내의 세력공

2) 이봉 중국총리의 제8期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1993. 3. 17.; 「文匯報」, 1993. 3. 17.

3) 杜攻, “世界進入了格局轉換的新時期,”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pp. 1~11.

4) Ji Guoxing, *Post-Cold-War Pacific Asia: A Chinese Perspective*(Shanghai, PRC: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1992), p. 18.

백이 형성되고 이를 기화로 지역강국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의 역할증대를 우려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역할증대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⁵⁾

또한, 중국은 冷戰 終息으로 인해 냉전시대에 잠재해 있었던 국가간의 영토문제, 인종분규 및 종교문제 등이 역내분쟁의 심각한 유발요인이 되는 것과 중국 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수민족들의 과격한 독립운동을 우려하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개발움직임 및 군사무기 현대화 등 군비증강 노력을 아·태 질서의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⁷⁾

3. 국가간 경제적 경쟁과 협력 심화

중국은 소련 붕괴이후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쇠퇴로 인해 국제경제질서 역시 다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서구, 일본간의 경쟁과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⁸⁾

5) 杜攻, “世界進入了格局轉換的新時期,”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p. 7.

6) 예를 들면, 중국은 대만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의 ‘대만독립’ 요구, 티베트에서 ‘과격국가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가 주동하고 있는 티베트독립 요구, 신강-위구르자치구에 영향을 주는 ‘이슬람교조주의자’들의 과격한 독립운동 등이 자국의 역내안정 노력에 불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imao Chen,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XXXIII, 3(March 1993), pp. 238~39.

7) 杜攻, “對轉換中的世界格局的幾點看法,” 「國際問題研究」(北京), 第4期, 1991年, pp. 2~9.

8) 陳小攻, “世界正處在重要的過渡時期,” 「世界知識」, 1992년 제1기, p. 5.

중국은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 보유국이지만, 미국 선진기술의 분야별 낙후성과 世界市場의 統制力 약화로 국제 경제질서가 다극화체제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급속한 經濟膨脹 速度로 이미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최대의 경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제강국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서구국가들 중에서 독일이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⁹⁾

중국은 선진국가간의 경쟁은 이들 국가들의 경제블럭화 노력, 보호무역주의 채택 및 과학과 기술경쟁으로, 협력은 국가간의 무역불균형 시정, 환경보호 및 마약통제문제 등에서의 협력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경우, 중국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어느 선진국도 자국의 거대한 市場을 배제하고는 선진국들간의 상호경쟁에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이다.¹⁰⁾

둘째, 중국은 중국 주변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선진국의 성장속도를 초과,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심화를 위해서도 아·태지역과

9) 黃素庵, “世界經濟格局新變化,”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pp. 183~209.

10) Qimao Chen,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 The Post-Cold War Era,” p. 239.

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개방된 지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¹¹⁾

셋째, 중국은 각국의 과학·기술수준이 國力の 승패와 향후 국제 질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냉전시대 국가간 경쟁이 주로 군사력 우위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한 국가가 보유하는 力量(경제, 정치, 과학 기술, 군사력 등)과 영토, 지리, 인구, 자원 등 각종 요소들의 종합적인 실체인 ‘綜合國力’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만일 중국이 금세기내에 선진국에 가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1세기에 가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¹²⁾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은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정치질서는 다극화 추세를 보이거나, 미·일간의 갈등과 역내에서의 분쟁이 증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경제문제와 관련, 중국은 국제경제질서 역시 다극화 추세를 보이고 국가간의 경쟁과 협력이 증대되고 한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에 의해 국가간 경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과학·기술의 확보, 자본과 경영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가장 중시하고, 개혁·개방정책의 목적을 이를 달성하는 데 두고 있다.

11) Chen Jingbiao, "Asia-Pacific Economic Ties Grow Closer," *Beijing Review* (February 8~14, 1993), p. 8.

12) Qimao Chen,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p. 239.

Ⅲ.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기본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두고 급진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아래 경제구조 개혁과 연안지역 우선 개발 및 대외개방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급진성장 위주의 발전

1992년 봄 중국 최고 지도자 덩소핑이 중국 남부지역 방문時, 성장위주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지지하자,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안정위주에서 급진성장 위주로 선회하기 시작하고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가 국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와관련, 중국은 헌법을 수정하고 성장목표율을 재조정하였다.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당의 유일한 국정노선으로 채택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을 삭제함으로써 자본주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3년 3월 제8期 全人大는 종래의 ‘계획경제’등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國有經濟’를 명기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경제는 국가가 소유하나 경영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백히 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인플레이션의 가중과 재정적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GNP성장율을 제고하는 등 급진 성장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1995년에 끝나는 8차 5개년계획과 10개년 발전계획(1991~1999)의 연평균 GNP성장율을 6%에서 8~9% 목표로 상향 조정

하고 목표기간도 2000년에서 1997년으로 3년 앞당겼다.

2. 경제개혁의 심화

중국은 기존의 경제성장 목표를 3년 앞당김으로써 경제개혁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 여러 부문에 걸쳐 경제개혁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생산의 質을 향상하기 위해 경영 책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국영기업의 民營化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본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국은 기업의 자본금 유치의 확대 등 금융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기간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화학공업에 치중하여 불필요한 설비를 폐지하고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경공업분야의 기술 혁신에도 주력하고 최고 경영자의 결정권을 중시하는 제도개편도 단행하고 있다.¹³⁾

중국은 가격체제를 개선하여 중앙정부가 결정하였던 많은 품목을 지방정부와 기업이 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이익증대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1~95년 5년 동안 약 60억元(약 11억달러)규모의 지원으로 350개 국방산업의 민영화를 추진 하고 있다.¹⁴⁾

13) Zou Jiahua, "Report on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or 1992 And the Draft 1993 Plan," *Beijing Review* (Apr. 19~25, 1993), pp. 12~18.
일인당 국민생산은 개도국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자원부문 생산은 괄목 할 만하다. 석탄, 철강, 비료, 시멘트, 면의류 등의 생산은 대폭 증가되고 있다.

14) *China Daily*, 1993. 1. 7

3. 대외 경제개방의 심화

중국은 1980년대 추진된 대외개방정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지속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들과의 무역과 이들 국가들의 대중국 투자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 선진국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무역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개방적 지역주의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가. 역내의 대중국 무역·투자 증가

중국은 1989년 이미 세계 제13번째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중국 총무역량이 중국 총생산액의 1/4에 달하여 명실상부한 수출지향의 발전전략 국가로 체제가 잡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1992년 약45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로 중국의 외환부채 규모인 약400~500억달러와 상쇄되어 중국의 무역실적은 양호하여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90년대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일본, 미국, 대만, 한국 등으로 특히 1980년대와 비교하여 대만과 한국과의 무역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와 같이, 1990년대에도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중·일 무역관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나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1992년 1월에서 10월간 중·일간 무역액은 前期間 對比 23.6%가 증가한 188억달러이며 중국의 대일수출액은 89억달러로 14%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중국의 대일 수입액은 약 98억달러규모로 33%가 증가하였

다.¹⁵⁾

중·미무역을 보면, 1992년 중국은 신발, 의류 등의 수출증가로 사상 최대규모인 182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큰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중국에게 무역흑자 감소방안과 미국상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인권, 무역적자해소 및 무기수출문제와 MFN 연장여부를 연계하는 정책을 실시하나 중 미 무역 및 투자협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대만 역시 대중국 교역량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 1993년 1/4분기 대만·중국간 교역량은 18.7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가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보다 32.3%가 늘어난 16.3억달러에 달하였으나, 대만측의 수입은 오히려 9.1%가 줄어들어 2.4억달러에 머물고 있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1993년도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93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⁷⁾

한·중수교이후 한국의 대중 무역이 증가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양국간 교역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한·중간 무역액은 1991년 44억달러, 1992년 63억달러에서 수교이후인 1993년에는 급증하여 10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중국의 7대 교역

15) *FBIS CHI*, 1992. 12. 27.

16) 1993년 5월 미국은 1993년 7월 3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대중 MFN 연장여부에 대해 '선연장 후조건부' 입장에서 중국에 MFN자격을 부여하였다. 「每日經濟新聞」, 1993. 5. 14.; 만일 중국이 MFN지위 획득에 실패할 경우, 중국상품의 미국수입 관세가 현저히 높아져 미국은 섬유관련 제품의 구매선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등지로 옮길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미국이 MFN조항을 우선 연장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MFN leverage가 점차로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7) 대만 경제부 무역국의 1993년 5월 24일 발표, 「每日經濟新聞」, 1993. 5. 25

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역내국가들의 對中 무역액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의 對中 직접투자 및 차관액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도 외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17억달러에서 1989년 56억달러로 급증하였다. 중국은 외부의 투자유치를 위해 1993년 5월 현재 3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51개국과는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¹⁸⁾

세계은행, 국제개발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에서 중국이 유치한 개발차관은 중국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고 있다. 중국은 1981~1990년간 92억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대외부채가 약400~50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보아 중국의 외환상환 능력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⁹⁾

1992년 초 등소평의 남부지방 방문이후, 선진국가와 국제차관기구들은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중국 浙江省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3억달러 차관(5년거치, 20년상환, 연리 7.43% 조건으로)을 제공하는 등 세계각국이 중국에 투자액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1992년 중국은 1979년이래 최고액에 달하는(53억달러) 차관을 확보할 수 있었다.²⁰⁾ 이와 같이, 역내국가와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의 개방정책을 지지하여 대중국 투자액을 증대하고 있어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더욱 심화될 가능

18) 지에 지안툰, CCPIT부회장, “중국경제현황과 대외개방,” 『每日經濟新聞』, 1993. 5. 25

19) *China Daily*, 1993. 5. 22

20) *China Daily*, 1993. 2. 7 ; 1993. 5. 22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 라비아 및 독일이 주요 차관국이었다.

성이 있다.

나. 중국의 개방적 지역주의 참가 노력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원동력을 무역에 두고 있어, 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원활한 교류와 증대를 위해 개방적 지역주의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경제권 형성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중국이 1986년에 신청한 GATT가입건이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으나, GATT조기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가입의 事前조치로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여 폭을 줄이는 한편, 元貨의 태환화에 노력하는 대신에 재가입 요건으로 중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해 줄 것과 저개발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원만히 타결할 경우,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이 GATT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²¹⁾

중국은 GATT가입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주도의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 아세안국가 등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상호보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소위 '화남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東北3省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과의 경제협

21) 「每日經濟新聞」, 1993. 3. 3, p. 6. 현재의 중국元貨 환율은 달러당 5.8원선. 이는 중국이 원화환율을 하루단위로 고시하기 시작한 지난 91년 4월보다 약 12%가 상승한 수준이다. 중국이 원화가치를 꾸준히 절하시키는 것은 시장실질 환률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력을 적극 추진하고 두만강유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각지역을 역내국가들과 연결하여 각기 다른 경제협력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개방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IV. 중국의 대외정책 조정

중국 지도층은 1990년대의 안보 및 경제환경이 1949년이래 자국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야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향후 자국의 대외정책이 독립자주, 반패권주의 및 전방위의교를 중심으로 조정될 것임을 밝히면서 선린관계유지와 발전, 미수교국과의 외교관계수립, 인접국가와의 국경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 獨立自主外交

독립자주의교 원칙이 향후 중국외교의 최우선 기본정책임이 1992년 10월 第14次 당대회²²⁾와 1993년 3월 第8期 전인대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중국은 독립자주의교의 기본목표가 종래부터 주창한 평화공존5원칙에 입각한 대외관계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²³⁾

22) “江澤民在中共14大的報告”, 「文匯報」, 1992. 10. 21

23) 1982년 중국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聯美反蘇정책의 탈피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독립자주의교를 주창하였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호요방은 1982년 ‘정부공작보고’에서 평화공존5원칙(和平共處五原則)에는 독립자주, 완전평등, 주권과

중국이 독립자주의교를 강조하는 배경은 첫째, 중국은 특정한 강대국에게 중국의 안보를 의존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과의 동맹관계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국가이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냉전이후시대 안보문제보다는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미·일·유럽간 갈등이 형성될 경우, 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둘째, 소련 붕괴이후,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가들이 인권과 영토문제 등을 빌미로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 이를 강력히 견지할 것을 표명한 것이다. 셋째, 중국은 역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회의 지위를 이용, 이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²⁴⁾

그러나, 1990년대에는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독립자주의교의 자주성이나 중간자적인 역할 기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토의 상호존중, 국내문제의 불간섭, 우호·발전관계의 건립 등 5원칙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24) 이봉총리의 제8기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文匯報」, 1993. 3. 17.; 이봉 중국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외교의 5대 기본지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평화공존5원칙에 입각하여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건립, 발전시키며, 2. 주변국가와는 선린우호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평화와 안정된 주변환경을 조성하며, 3.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발전도상국과 우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4. 상호 존중,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하에서 서방국가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며, 5.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 보호하고 지역간 충돌과 국제분쟁을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2. 反霸權主義

중국은 독립자주의교를 지향하는 한편, 어느 국가나 집단의 패권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1970년대 이후부터 주장한 반패권주의가 지속됨을 강조하고 있다.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제14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의 패권주의나 강권주의에도 반대하고 패권행위나 강권행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언급하여 중국이 평화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⁵⁾

1970년대와 1980년대 중국이 선언하고 있는 반패권주의는 소련을 지칭하여온 것이나 냉전이후시대 러시아의 위상약화와 중국과의 관계증진으로 ‘러시아의 패권주의’는 사실상 그 의미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²⁶⁾ 이는 장기적인 전략목표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반패권주의를 대외정책의 기본입장임을 밝히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역국가들의 패권행위를 억제할

25) “江澤民在中共14大的報告”, 「文匯報」, 1992. 10. 21

26) 周照, “「十四大」後的中共外交政策: 持續與改變”, 「中國大陸研究」(臺北), 第36卷, 第1期, 1993年 1月, p. 55.; Sino-Russia Joint Communique, “Yeltsin Visit Marked by Declaration, Agreements,” in *FBIS CHI*, 1992. 12. 18; 중국은 엘친의 중국방문(1992. 12. 16~12. 18)時 러시아와 함께 아·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패권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주의에도 반대함을 재확인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미국을 지칭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1993년도 자국의 외교정책기조를 설정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증진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려는 기도는 저지할 것을 표명하였다. 인용, 「인테르팍스 통신」, 1992. 12. 1; Xinhua, 1992. 12. 1. in *FBIS CHI*, 1992. 12. 2

필요성과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러 초강국간 전쟁위험이 감소됨에 따라, 중국은 역내에서 지역국가들이 세력경쟁이나 패권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지역강국인 중국의 위상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과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지역패권주의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중국은 미국과 연계하여 소련에 대항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은 중국이 제3세계의 종주국 노릇을 실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의심을 유발시켜 왔다. 냉전 이후 미국과의 연계가 시급하지 않은 중으로서는 미·러간의 냉전 종식으로 인한 자국의 전략적 입지악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자국이 비연계정책을 고수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이유로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1992년 제10차 비동맹운동(Non-alignment Movement)의 옵서버로 참가하고 유엔의 환경 및 발전회의에서 Group of 77와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²⁷⁾

3. 全方位外交

중국은 자국의 독립자주나 반패권주의외교는 안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동시에 경제를 우선시 할 수 있는 전방위외교를 강조하여 대외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전방위외교의 기본요소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경제우선의 평화외교와 다자적 접근을 들 수 있다.

27) *FBIS CHI*, 1993. 1. 15, p. 4.

중국이 '평화외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여부가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역내안정과 평화유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지도층은 1989년 6월 천안문사태시 주변국가들과의 급속한 관계악화로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되풀이 해서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외교'라는 기치아래, 주변국가와의 선린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수교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인접국가와의 국경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온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이스라엘, 독립국가연합, 인도와의 수교, 베트남과의 정상화 및 수교(1992. 2. 11)²⁸⁾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맹국인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수교(1992. 8. 24)를 실현시킨 것이다.

중국은 또한 인접국가와의 변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은 라오스와 변경문제(1992. 1), 러시아와는 중·러 동부변경지역(1992. 3)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였고 이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과 변경문제 해결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은 중·인도간의 변경문제와 중·베트남간의 변경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룩하였다.²⁹⁾

다자적 접근과 관련, 중국은 자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1992년 캄보디아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1992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 미사일기술통제기구

28) 이붕 중국총리는 중국총리로서는 21년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다(1992. 11. 30~12. 4) ; *Beijing Review* 52 (28 Dec-3 Jan 93), pp. 8~11

29) Liu Huaqiu, "China's Diplomatic Achievements in 1992," in *FBIS CHI*, 1993. 1. 15, pp. 3~6

(MTCR) 서면가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볼 때,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역할 증대문제, 한반도문제, 군축문제, 역내분쟁문제 등의 해결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다자적 해결방식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⁰⁾

일본과 관련, 중국은 동남아 및 유엔 등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나, 일본의 역할증대를 지지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미·일군사동맹유지를 선호하면서 역내안보에 대한 다자적 접근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독자적인 입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을 다자적 안보장치속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나 동북아 안보문제와 같은 소지역의 혹은 아·태지역과 같은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서도 다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역내국가들의 입장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아세안확대장관회의(ASEAN-Post-Ministerial Conference)가 지역정치 및 안보포럼을 구성하는 초기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³¹⁾, 아세안확대장관회의의 안보문제 논의를 지

30) Ji Guoxing, *Post-Cold-War Pacific Asia : A Chinese Perspective*, pp. 13~14.

중국은 아·태안보협력의 방향이 다각적(multi-tiers)방식이나 다양한 형태(multi-forms)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안보구조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각적 방식에는 쌍무적, 지역적, 준지역적인 면이 포함되며, 다양한 형태는 지상발사미사일, 해상발사미사일, 군비통제, 비핵화문제 등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해결을 담당하는 팀이나 타스크포스를 의미하고 있다.

31) Ji Guoxing, *Post-Cold-War Pacific Asia : A Chinese Perspective*, pp. 13~14

지하였다. 1993년 5월 12개 아·태국가와 EC제국이 93년 7월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직후에 안보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을 초청키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³²⁾

V. 개혁·개방 제약 및 촉진요인

중국이 개혁·개방의 심화를 제약 또는 촉진하게 되는 요인들을 제약 및 촉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대외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1. 제약요인

가. 대외적 제약요인

대외적 제약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미·러간 평화공존과 협력관계 증진으로 서방국가들의 대 중국 안보·전략적 고려가 감소됨에 따라 중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간섭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미·러간 급속한 협력관계로 미국이나 러시아가 상호 대치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연합관계(alignment)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가들이 인권, 영토문제 등을 거론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2) 1993년 5월 일본을 방문중인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은 아세안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아·태지역 안보기구창설 움직임에 대해 아세안의 연례외무장관회담을 통한 논의를 지지하였다. 「한국일보」, 1993. 6. 1

둘째, 선진국의 경제침체 가능성과 선진국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만약,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갈 경우, 선진국들 간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술도입과 수출전략에 차질을 가져와 중국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다. 서방국가들은 자국 경제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GATT 가입, 무역마찰, 인권문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셋째, 중·미간 무역·통상문제가 미국의 대중국 인권문제와 함께 제기될 경우, 통상마찰이 지속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노력을 억제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중국은 천안문사태시 미국의 주도하에 자국과 선진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적자폭 축소 및 중국내 인권개선 등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추진한 바가 있다.³³⁾

넷째, 역내국가들은 중국의 군비증강 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만약, 중국이 역내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을

33) 미국이 1993년 5월 대중국 최혜국대우부여를 1년간 연장하기로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중국은 3년의 희망을 남긴 반체제인사 徐立文을 12년만에 전격적으로 석방하였다. 「한국일보」, 1993. 6. 1.; 또 다른 예로는 미국의 대만무기판매에 대한 보복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주권사항에 대한 내정간섭 배제입장에서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경제우선이라는 고려로 주저한 것이다. Zhai Zhigang, "Refuting Theory of Military Balance," in *Guangming Ribao*, 1992. 10. 6, cited in *FBIS CHI*, 1992. 10. 15, pp. 9~10;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150대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떠한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중국의 대미 무역수출이 자국의 전체수출의 25%를 점하고 있는 점과 지속되고 있는 대미 무역 흑자에 어떠한 차질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爭鳴誌에 의하면, 중국지도층 중 '비둘기파'(개혁파)가 대과보

강화하고 역내분쟁에 무력적으로 개입할 경우, 역내국가들의 대중국 투자가 위축되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나. 대내적 제약요인

대내적 제약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국방관련 분야의 재정압박이 예상되어 개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경제체제를 ‘국가경제’체제에서 ‘國有經濟’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³⁴⁾ ‘국유경제’체제가 여전히 국가계획의 당위성을 표방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시장경제의 흐름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국가계획 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중국이 통제를 선호하여 시장기능을 축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영기업이 현재도 ‘국가관리’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적자경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국방관련부문의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

다 우세한 입장에 있어 부시 미대통령의 對 대만 무기판매 명령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다. 爭鳴지는 중국의 비둘기파가 부시의 대통령직 再選을 민주당 출신 클린톤의 대통령직 당선보다 선호하였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in *FBIS CHI*, 1992. 10. 15, pp. 5~6

34) 중국헌법 제7조는 “國有經濟는 사회주의 全民所有制의 경제로서 국민경제의 주도적 역량이다”라고 명기하여 여전히 국유경제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국은 국방부문의 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가함으로써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감소로 이들 부문의 성장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외개방과 관련, 중국은 대외개방지역을 내륙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간 소득수준과 발전정도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고 지역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편차는 대외개방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³⁵⁾

셋째, 중앙정부의 경제권한 분산등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 및 집행권한이 1980년대보다 더욱 약화되어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이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연안지방정부는 천연자원과 자본의 할당을 국가경제의 발전보다는 지역 경제발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자본가나 외국정부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 관련한 통제권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1993년 3월 개최된 第8期 全人大에서 강태민-이붕체제로 확정되었으나, 등소평의 사망으로 보수·개혁派간의 권력투쟁으로 정치적 불안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제8기 전인대는 정치개혁 부문과 관련, 黨·政의 방만한 관료체제의 간소화에 치중함으로써 권력배분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 실현에는 소극적이었

35)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中國經濟と‘市場化’の現状,”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1993. 4, pp. 49~50. 중국 省水準의 특징을 3개유형으로 구분한 중국경제의 ‘市場化’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南部沿海地區가 가장 시장화가 진척되고 있는 반면, 동북지구는 거의 시장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내륙지구는 시장화가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이 국가주석직을 차지하여 국가·당·정부·군부의 막강한 권력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권력집중현상을 나타내는 限時的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한 결과로 정치적 불안 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³⁶⁾

다섯째, 등소평 사후 정국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軍이 등소평사후에 강택민-이붕 체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점이다. 軍의 지지여하에 따라 집단지도체제의 장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어느 지도자든지 軍의 입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어 軍부의 국방력 증강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軍현대화계획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되고,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서방국들의 대중국 첨단 과학·기술의 이전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중국의 과학 기술발전은 크게 저해되어 개혁·개방 심화를 억제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은 현재 지나친 고속성장과 원료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이라는 「2高」와 에너지 부족과 수송난이라는 「2緊」, 그리고 산업 기반시설 계획의 혼란과 금융질서의 혼란이라는 「2亂」 등 여섯가지 중대한 경제문제에 봉착해 있다.³⁷⁾ 이러한 문제가 극심한

36) *South China Morning Post*, 1993. 3. 8

37) 「星島日報」(홍콩), 1993. 5. 31 ; 「한국일보」, 1993. 6. 1 ; 중국은 사실상 에너지와 수송부문의 한자리 성장을 위에 산업성장율은 두자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형태는 9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아 에너지와 수송부문의 발전이 시급하다. 중국은 92년 GNP성장율이 12.8%에 달하는 고도 성장과 일인당 곡물생산 385Kg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평등정책인 식량배급제를 가격자유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12~40%의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옥수수, 쌀, 밀가루 등 주식용 식품가격의 경우는 인상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사회의 부패문제와 맞물려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정책에 지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경제혼란과 등소평사망으로 인한 정치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중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단기적으로 중국은 안정화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2. 촉진요인

가. 대외적 촉진요인

개혁·개방을 심화할 수 있는 대외적 촉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대국의 대중국 군사 위협이 감소되고 있다. 소련 붕괴와 러시아의 대중국 군사무기 수출 등으로 중·러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등으로 중국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을 증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다만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선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방비 축소를 통해 역내국가들의 대중국 안보위협감이 감소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과 주변국가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됨으로써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급격히 고립화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동시에 역내국가들이 중국 경제체제와 경쟁관계에 진입함으로써 중국으로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성의 심화를 위해서도 중국이 비타협적인 대

외정책 보다는 타협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냉전이후시대 아·태지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점이다. 역내의 경제발전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나. 대내적 촉진요인

첫째, 중국 연안지역 주민들이 경제발전에 대한 상대적 만족감으로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이 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동북3성과 내륙지역으로 파급됨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들의 물질적인 향유혜택 기회가 더욱 증가되면, 이들 주민들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증가할 것이다. 중국인민의 물질적 향상욕구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될 경우, 인민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우선 정책을 더욱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국지도층의 세대교체로 집권층의 연령이 과거보다 더욱 젊어짐에 따라, 實利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개혁·개방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셋째, 중국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중국지도층이 정권안정과 체제유지를 위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것이다. 중국은 천안문사태 경험으로 인권탄압과 같은 문제로 장기간 선진국들과 소원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자본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지 못한 점을 중시할 것이다. 이로써, 중국이 국내인권 탄압문제에 더욱 신중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의 대중 유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경기과열과 물가상승 등으로 개혁과 개방의 속도에 차질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역내의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지 않는 한, 중국은 점진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관료체제의 부패문제, 중앙통제식의 市場性 制約, 외국인 투자 및 무역에 대한 법적제한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기의 여러 요인중, 촉진요인이 제약요인보다 강하게 대외정책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협적인 대외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지도층의 변화, 인민의 근대화와 물질적 향상욕구 증대, 주변국가와의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의 경쟁관계 등으로 중국은 보다 효과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 론

199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은 선진국가와의 관계 발전과 역내의 안정유지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여러국가와의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며, 경제발전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지역안정 유지를 우선적으로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은 미·일 안보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선진기술, 자본도입과 시장확대를 위해서, 이들 국가

와 실질적인 관계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역내안정 유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견제 및 핵확산 방지를 위해 다자간 안보협약에 점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1990년대 한국과는 기존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며 북한과는 선린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1세기초에는 중국경제의 발전으로 중·일간 경제 및 안보적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요소는 점차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전입되면서 중국의 탈사회주의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빈 면

중국의 대외개방과 동아시아경제

陳 莊

亞洲太平洋研究項目主任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I.

현재 세계경제가 상호의존·상호합작과 상호경쟁의 추세를 현저히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이 장기간 실행한 폐쇄경제방식을 폐기하고 대외개방을 실시한 것은 중국경제발전에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태경제 특히 동아시아경제의 장기적인 번영에 심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10여년간 중국이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1.

중국은 多層的이며 全方位的인 개방체제를 구축하였다. 1979년 국무원은 광둥, 복건 양성에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고 심천, 주해, 선두, 하문지방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연해 14개 항구도시, 양자강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민동남지구, 산둥반도, 요동반도 및 환발해만지대 등을 개방하였다.

1992년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은 양자강연안 28개도시, 8개지구, 동북과 서남지구의 13개 변경도시 및 내륙지구의 11개성들을 개방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 개방정책은 연안지역을 따라 변경및 내륙지방 전반에 걸쳐 전개됨으로써 현대화건설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뜻한다.

2.

중국은 1978년이후 무역체제 및 관련된 제도를 개혁하고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연결작업을 가속화하였으며 특히 1988년에 단행된 두 차례의 경제개혁으로 무역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첫째, 중국은 무역관련기업에 대해 경영책임제를 실시하여 중앙의 기업경영권을 기업자체에 이관하였다.

둘째, 중국은 조정환율제를 통해 수출기업의 외환보유를 허용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액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철폐하여 수출기업 자신이 모든 분야의 경영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은 새로운 대외무역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관련된 제도를 수정하고 국제지적권의 보장, 국제적으로 통용된 상표의 활용등 국제관례에 따를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였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바르샤바협약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방법을 참조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외환관리규정》과 《비금융기구외환업무관리규정》을 비준함으로써 시장경제와 대외개방에 필요한 수요에 걸맞게 적용해 오고 있다.

3.

중국은 수출을 신장하는 한편, 국내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외국사업가의 자국진출에 좋은 조건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수입조절세와 중앙통제 방법을 취소해나가면서

수출예치금과 수출입관리허가 상품품목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향후 2년이내에 수입허가품목의 2/3이상이 취소될 것이다.

중국은 관세의 점진적 감소를 통해 330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평균적으로 7.3% 정도 인하하고 환율제도를 개혁하였다. 농·공업부문에서의 개방을 기점으로 중국은 점차적으로 금융, 보험, 상업, 관광, 교통운수부문 등까지 개방을 확대하여 이들 부문에 대한 외국사업가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게 한 것이다. 그 밖에, 중국정부는 47개의 무역관련 규칙과 제도를 이미 공포한 바 있으며 무역신장을 위해 대외무역관련입법을 서두르고 있으며 무역정책 및 법규의 투명도를 강화하고 있다.

II.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자국의 현대화계획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하고 있다. 1980년대 중국의 고도성장은 세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중국은 발전도상국에 불과하고 앞으로 많은 곤란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15년간의 노력결과 중국경제의 면모는 대단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는 국제경제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국제경제체제에 있어 이미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중국경제의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경제상황은 아시아경제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많은 인구수는 비율면에서 동아시아의 73%와

6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경제의 향방 및 사회안정 여부는 동아시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실시 이후 중국경제는 기본적으로 좋은 발전 추세를 유지하여 1980년 실질경제성장율이 8.9%에 달하였다. 그 후 발전속도가 방만하여 경제조정기를 거치게 되었으나, 1992년부터 경제는 다시 고도성장의 추세를 나타내어 평균 12.8%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개인당소득이 증가하여 도시생활자의 평균 소득은 1978년의 316元에서 1992년 1,826元으로 4.8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농촌생활자의 평균소득은 동기간 134元에서 784元으로 4.1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인민의 생활은 '溫포型'(온포형)에서 '小康型'(소강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부 연안지역은 이미 소강형 수준에 거의 접근하기도 하였다.

2.

중국의 국내시장에서의 수요 급증은 동아시아의 상품판매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대중국 시장점유율은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의 큰 잠재력과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의 대중국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978년 중국의 무역총액은 109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 이미 806억달러에 달해 14년간 6.4배의 증가를 보였다. 일본경제연구소는 2000년에 중국의 무역총액은 2,051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80년대부터 실시된 중국의 무역발전상황으로 볼 때 이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금세기말까지 년평균 8~9% 성장율을 유지하여 국내의 기본건설 투자는 확대되고 공업용 원자재 및 기계설비에 의한 수출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달할 것이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수요욕구가 증가되어 1970년 국민평균소비액은 175元이나 1990년 714元에 달하여 3배의 증가를 보였다. 인민의 소비지출중 의료 및 주택비가 점하는 비율이 적은(1990년에는 8.4%정도) 중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인민의 소비부문과 소비형태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후반기부터, 인민의 소비는 중·고가품에 치중되고 있어 식품, 복장, 가전제품 등의 판매량이 상당하다.

한편, 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에 노력하고 있어 중국의 시장개방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외국 상품의 중국 진출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3.

중국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동아시아의 중요한 '생산기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개방정책실시 이후, 외자유치를 위한 중국의 정책 및 환경개선노력은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1979년부터 83년까지 외국투자액 중 중국이 사용한 액수는 18억 달러이었으나 1992년에 이르러서는 총 345억 달러에 달하였다. 1992년 1년간 유치한 외국의 투자율은 총투자액의 1/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91년까지 외국자본가의 투자기업수는 1만7천개이며 이중 생산기업부문이 85% 정도에 달하였다.

외국기업은 연안지구의 경제발전 추진을 가능케 하였는 바, 외자

를 가장 많이 유치한 광둥성의 경우를 보면, 1979년~91년 기간사이 매년 평균 실제성장율은 12.4%에 달하였으며, 공업생산율은 20%이상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992년 5개 경제특구와 14개 연안개방도시의 무역액은 이미 28억 달러로 중국 총무역액의 34%에 달하였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三資(中外合資, 中外合作, 外商獨資)기업의 무역액이 급속히 증가하여 1992년에는 174억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44%나 증가하였으며 91년 중국 총무역에 대한 비율이 16.8%에서 20.1%까지 증가한 사실이다. 이는 외국기업이 중국경제발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미 동아시아의 '생산기지'로서 두각을 나타냄과 동시에 외국기업이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중국경제가 '국제화'되기 시작하여 경제협력부문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발전수준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중국의 대외경제활동은 무역부문에 치중되었으나, 개방이후 협력부문영역이 비교적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외국의 자본, 기술 및 경영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수출신장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협력방식이 '接受型'에서 '互動型'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承包工程(일종의 계약제임)과 勞務合作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1979년에서 1992년 6월말까지, 220억 달러규모의 공동경영 및 노무협력부문이 승인을 받았으며, 완성된 영업의 총규모는 130억 달러에 달하였다.

둘째, 1979년~90년간 비무역부문 기업수는 801개에 달하였으며 총투자액은 24억 달러로 이중 중국측 투자는 10.3억 달러규모로 43%를 점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총투자규모는 아직 대단히 적으나 그 의미는 중대하다. 이는 중국기업이 이미 국가경영방식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술투자가 증가되고 기술합작의 호환성이 증대되었다. 1990년 중국의 기술도입 총액은 12.7억 달러이며 동기간 중 중국의 기술수출총액은 9.5억 달러로 기술무역이 점차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기술무역체제로 보면 중국의 기술도입은 주로 선진국가에, 기술수출은 개발도상국에 치중되어 있다.

III.

80년대 아·태경제, 특히 동아시아경제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여 중국의 대외개방에 비교적 좋은 외부조건을 마련하였다. 90년대 동아시아경제는 비록 많은 문제점과 곤란에 직면할 것이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90년대 일본을 제외한 기타 동아시아국가의 년평균성장율이 80년대와 비슷한 7.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종합적으로 볼 때, 90년대 중국이 처한 주변 경제환경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긴박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경제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완전무결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주변국가 및 주변경제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

아시아지역의 좋은 경제발전추세를 유지하여 대외개방과 동아시아 경제발전이 상호보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자신의 현대화건설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경제의 장기적인 번영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1.

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환경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10여년간의 중국의 경제발전속도는 확실히 빨랐으나 국민소득이나 국력면으로 볼 때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 GNP상으로 볼 때 1992년 중국은 360억 달러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제고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금세기말까지 중국이 두배의 GNP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평화롭고 안정된 주변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동아시아지역의 정치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역內的 충돌사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는 전방위에 걸쳐 좋은 상태에 있으며 중국은 향후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공존5개원칙에 입각하여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중국은 평등호혜원칙하에, 동아시아국가 및 이들 지역과의 경제합작을 가일층 공고히 할 것이다. 80년대 동아시아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각국간에 경제보완성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풍부한 자원, 거대한 시장의 잠재

력, 상당한 수준의 기초과학기술 및 공업체계의 구비, 특히 노동집약형산업의 구비 등이 외국과의 경제합작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대외개방의 속도에 맞춰, 90년대 중국과 동아시아와의 경제관계는 강도와 깊이면에서 더욱 증가될 것이다.

중·한경제관계로 말하면, 수교이전의 민간왕래는 좋은 기초를 다졌으며 1992년 양국간 무역액은 82억 달러로 90년에 비해 1.2배 증가하였다. 1992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총액은 이미 4.88억 달러이며 기업수는 434개로 이중 60%가 92년에 건립된 것이다. 92년 8월 중·한수교는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시기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합작은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주중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95년까지 중·한무역은 200억 달러에 달하여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3번째로 큰 경제합작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3.

중국은 동아시아각국 및 동아시아지역과 함께 신국제경제질서의 건립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가 新아·태경제질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계대전이후의 역사적 교훈에 따라, 우리는 미래의 신국제경제질서는 반드시 공평·평등·합리와 상호이익의 원칙을 전제하여야 하며 구국제경제질서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태지구에는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의 형태가 다양하고 각종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신경제질서를 건립함에 있어 확실히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상술한 원칙에 의거, 건립되어야 한다. 상술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의 각국민은 자국의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사회제도 및 발전방향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둘째, 역내국가들간의 대소, 강약, 빈부차이와 관련없이,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역내의 경제문제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역내의 선진국가들은 신흥공업국가 및 지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자본 특히 기술의 막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수준의 차이를 축소시키며 역내의 공동번영을 실현시켜야만 할 것이다.

넷째, 역내에서 발생한 국가간의 경제모순과 마찰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의 출현을 반드시 방지하고 역내의 개방적인 경제협작체제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 역내의 선진국가들은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물론, 경제질서의 형성은 한번에 완성하기란 결코 불가능하다. 장기적이고도 우여곡절의 과정을 경과할 필요가 있으나, 역내 각국민의 합작과 해이하지 않는 부단한 노력으로서 신경제질서의 형성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동북아 안보질서

申 相 振*

◁ 目 次 ▷

- | | |
|-----------------|-----------------------|
| I. 서 론 | III. 중국의 군사현대화 현황과 전망 |
| II. 중국의 안보전략 변화 | IV. 동북아질서에 미칠영향 |

I. 서 론

지난 10여년 동안의 개혁·개방정책 결과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1990년대 들어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군사현대화 작업을 적극화 하고 있다. 또한 개혁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정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1990년대 중국의 핵심 대외정책 목표의 하나인 바, 향후 중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구소련 붕괴와 역내 주둔 미군 감축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이 더욱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중수교 이후에도 중국이 북한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바,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동북아질서 재편과정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본문에서는 냉전과 탈냉전의 과도기에 처해 있는 동북아질서속에서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안보전략을 개괄해 보고, 중국의 군사현대화 실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 전망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안보전략 변화

鄧小平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중국은 4개 현대화 방침에 입각하여 기존의 안보전략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다. 1978년 일본과의 평화우호조약 체결과 1979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로 중국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최대의 안보위협 상대로 인식하였던 소련으로부터서의 군사적 위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1985년 고르바초프의 訪中을 계기로 중·소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북방으로부터서의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제3세계의 역할증대 등 다극화 추세 및 반전 평화운동의 확산 등도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간 이익확보를 둘러싼 분쟁이 완전히 사

라질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 국지전쟁 발발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아울러 1979년 베트남에 대한 응징전에서 「인해전술」을 바탕으로 하는 「人民戰爭」이 실패하여 중국의 국제적 위신이 손상받게 됨으로써, 중국은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군사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85년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냉전시기 강조하였던 「대규모, 핵전쟁」(早打, 大打, 打核戰爭) 대신 「소규모, 통상전쟁」(晚打, 小打, 打常規戰爭)에 대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군사전략 지침에 의거 중국은 국방조직을 새로운 실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군의 화력과 기동력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¹⁾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의 안보환경은 198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면서 변화되고 있는 바,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이 역내에서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소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和平演變」(평화적 수단에 의한 체제변혁) 기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대만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F-16 전투기 판매 결정,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 인권개선 요구, 미의회의 2000년 북경 하계올림픽 개최 반대 결의안 채택, 영국의 홍콩 민주화 개혁 추진, 프랑스의 대대만 미라주 전투기 판매 결정 등도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1) 1980년대 중국 군사현대화 작업의 중점은 기존 11개 군구를 7개 군구로 축소 개편하고, 병력을 대폭 감축(1백만명)하는 등 현대전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직개편 작업에 두어졌다.

일련의 음모라고 간주하고 있다.²⁾

둘째, 중국은 미·러의 역내 주둔 군사력 철수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로 중국의 안보환경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내 정치·경제적 위기로 대외문제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바, 아프가니스탄, 몽고 및 베트남 등으로부터 군사력을 철수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1980년대 초까지 중국의 안보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러시아에 대한 안보부담을 완화시킬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내 경제회복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도 필리핀내 기지를 철수하고 역내 배치 전술핵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역내에서 중국의 활동공간이 전례없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³⁾ 아울러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러시아, 인도, 베트남, 한국 등 주변국과 관계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국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일본이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 캄보디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으며,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역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안보기구 설립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바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⁴⁾ 또한 개혁·

2) “從中國威脅論談起,” 「文匯報」(香港), 1993. 2. 19 社論.

3) 鄭言思, “1992: 靈活務實的中國外交,” 「瞭望」, 1992年 第51期 (1992. 12. 21), pp. 7, 46; 錢其琛, “回顧與展望,” 「人民日報」, 1992. 12. 30.

4) Bonnie S. Glaser, “China’s Security Perceptions: Interests and Ambitions,” *Asian Survey*, vol. 33, no. 3 (March 1993), pp. 256-259.

개방정책 채택 이후 중국은 내륙지역 보다 연안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넷째, 중국은 남사군도와 조어대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대만의 분리 독립 움직임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역내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중국은 이들 문제들이 국제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이해 당사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역내에서 주도권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강대국간 대규모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감소되었으나 지역차원의 소규모 전쟁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양극체제하에서 억제되었던 국가간, 민족간, 종파간 분쟁 등이 다극화에 따라 분출될 수 있으며, 미·러가 대규모 군축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첨단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국지전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 따라서 중국지도부는 과도기의 역내질서 재편과정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남사군도의 영유권 확보, 대만통일 과정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일본의 해군력 증대 등에 대비하는 것을 1990년대 안보정책의 중요

5) 萬光, “九十年代亞太格局的演變,” 「瞭望」, 1992年 第44期 (1992. 11. 2), p. 41; 譚取榮, “複雜多變的國際形勢,” 「瞭望」, 1992年 第49期 (1992. 12. 7), pp. 35-37.

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바, 중국의 안보전략의 일차적 관심은 변경방위 문제로부터 해양과 영공방위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중국의 안보전략은 「沿岸防衛戰略」에서 「遠洋防衛戰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⁶⁾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종합국력이 신장될 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안보전략이 영토보존의 소극적 자위로부터 대양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팽창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중국의 군사현대화 현황과 전망

이와 같은 안보전략에 의거, 중국은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군조직을 개편하고 군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의 승패가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숫자보다는 첨단무기와 병력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판단하여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반면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군 조직 개편

기존의 군 조직체제가 비능률적이고 방만하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저해하여 왔다고 인식, 중국은 1980년대 이래 군구편제 개편, 군지도부 인사개편, 군관의 복무조례 제정, 합성군 조직 및 「快速反應部隊」 설립 등을 통해 군의 정예화, 정규화, 현대화를 도모하

6) 중국이 의미하는 「遠洋」은 대륙붕과 200Km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중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南沙群島·西沙群島 등 중국의 모든 영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 있다.

국방현대화 방침에 따라 중국은 1983년 당 중앙군사위와는 별도로 국가 중앙군사위를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黨軍에서 국가의 正規軍으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기하고자 노력해 왔다. 과거 군대가 정치파벌 대립에 개입하였던 점이 중국군 현대화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바,⁷⁾ 군대의 국가화 조치를 통해 중국은 군의 정치개입 및 군사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파벌대립이라는 폐단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1992년 14차 당대회 이후에도 중국은 군부내에 파벌을 조장함으로써 군을 사조직화 하였던 楊尙昆과 楊白氷을 추종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젊고 전문지식을 구비한 직업군인을 군 요직에 등용하여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제거하고 군부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⁸⁾

또한 중국은 군의 정규화를 위해 4년제 사관학교를 설립(1983. 9)하고, 대졸간부 후보생 제도를 도입(1984. 2)하는 등 군간부의 4화(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혁명화)를 추진하여 왔다. 나아가 1988년에는 군관의 복무조례를 제정하고 계급제도(1965년 폐지)를 부활시킴으로써 군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 우주, 항공 등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文官制度」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방만한 군 조직 정비 차원에서 종전 11개 군구편제를 7개 군구로 개편(1985. 6)하고, 비전투부

7) 丁樹範, “論四十餘年來中共軍的發展,”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2期 (1992. 12), pp. 25-33.

8) 이에 대해서는 “The PLA After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China News Analysis*, no. 1478 (February 1, 1993), pp. 1-9 참조.

대를 중심으로 한 4,054개의 단위부대를 해체(1988. 3)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 작업과 더불어 중국은 현대전 수행을 위한 군 정예화 차원에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0만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하는 한편,⁹⁾ 군의 전투력 제고를 위해 체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1989년 이래 중국은 각 군구에 「快速反應部隊」를 설치하여 군의 기동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돌발적인 지역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였으며, 1992년에는 총참모부 직속의 장갑병, 포병, 방화병 및 공병 등 4개 병과를 통합한 「特種部隊」를 창설하였다. 또한 1993년 중국은 군 현대화 및 군부내 江澤民의 입지 강화를 위해 6만 4천명의 군간부를 퇴역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⁰⁾

2. 국방비 증액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과거 중국은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현대화를 덜 중시하여 미국이나 소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¹¹⁾ 그러나 중국은 지난 14년 동안의 경제발전 결과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근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1980년대 중국은 「先

9) 중국은 1985년 6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병력감축 계획을 결정하여 1987년까지 100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감축하여 현재 약 303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2년에도 30만명에 이르는 감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明報」, 1992. 7. 7.

10) 「人民日報」, 1993. 5. 20.

11) 1993년 중국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 약 73억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국민생산 총액의 약 1%만을 국방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일본(1993년 약 377억달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經濟, 後國防」정책을 채택하였는 바, 중국의 총예산중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의 총예산에서 국방비가 점유하는 비중이 3.7%(동기 총예산 증가율은 13.5%)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 이후 중국은 군부의 단결과 사기 진작 및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매년 12%(동기 예산 증가율은 약 8%) 이상 증액하여 왔다. 특히 1993년에는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4.8%나 증액(약 73억달러)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예산액은 실제 국방비 지출액 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방항목의 예산에는 인건비, 보급물자, 식량 및 급료 등만을 포함하고 대외군사지원, 무기구입비 및 군수산업관련 예산 등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액은 공표된 국방예산액의 두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¹²⁾ 아울러 군수산업의 민수품 생산 및 대외무기 수출(연간 약 13.4억 달러)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외국의 무기구입 등 국방비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

12) 黃炳茂, 「新中國軍事論」(서울: 法文社, 1992), pp. 87-92; James Walsh, "Thunder out of China," *Time*, April 12, 1993, p. 23.

13) 1988년 중국 인민해방군 總後勤部長이었던 趙南起는 인민해방군 경비의 약 70% 정도만을 정부예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인민해방군이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China: spit and polish didn't cost much," *The Economist*, May 14, 1988, pp. 36-37; Eric Hyer, "China's Arms Merchants: Profits in Command," *China Quarterly*, no. 132 (December 1992), pp. 1102, 1111.

〈중국의 국방비 증액 추세〉

(단위 : 인민폐)

	87	88	89	90	91	92	93
국 방 비	209.7	217.9	251.5	290.3	330.3	370.0	425.0
전년대비 증가율	1.2	3.9	15.4	15.4	13.8	12.0	14.8
재정지출중 국방비	8.6	8.1	8.3	8.4	9.3	9.5	8.0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2」(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1992); 劉仲黎, “關於1992年國家豫算執行情況和1993年國家豫算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3. 4. 4.

이와 같이 중국이 최근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군사 무기 장비 현대화

과거 구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지상군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군과 공군력 강화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많은 수의 지상군을 유지하여 왔으며,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하여 첨단무기 보다 재래식 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다. 중국은 현재 230만명의 육군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은 26만명, 공군은 약 47만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본토와 구소련 전체를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ICBM 8기와 구소련 극동지역과 아시아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IRBM 6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4천여기의 전투기와 원자력 잠수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핵전력과 군장비는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대만에 대한 주권 회복과 남사군도 영유권 확보 등 1990년대 안보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걸프전에서 첨단무기의 위력이 입증된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 장비 현대화를 적극화 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군사 장비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이 과거와 같이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하여 무기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등 서방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의 제트엔진을 중국이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중국은 외국으로 부터 첨단무기(기술)를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중국의 무기 장비 현대화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의 무기기술 도입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¹⁴⁾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 등 서방의 대중 무기기술 이전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무기 기술을 도입하는데에는 재정적·기술적으로도 제약이 있다. 서방의 무기기술은 성능이 우수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중국의 군사기술체제가 서방의 기술체제와 접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4)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의 대외무기 기술 도입은 총 40건중 미국이 16건, 프랑스 12건, 캐나다와 이탈리아 각 2건, 소련 1건 등이었다. SIPRI 연감.

아울러 미국은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국에게 첨단무기기술 제공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주요 무기기술 도입선은 러시아 등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다. 남사군도 등지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은 외양에서 항공지원을 할 수 있는 해군 항공력과 공중 급유기나 항공모함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1991년 5월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秦基偉 국방부장이 소련을 방문, 수호이 27전투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 군사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1992년에도 삼소노프 러시아 국방부장(1992. 2)과 열친 대통령(1992. 12)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러시아의 항공기술, 수호이 27 전투기, 미그 29기 및 디젤 잠수함 구입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더욱이 남사군도 영유권 확보와 대만 통일을 실현하고자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최신예 항공모함 구입문제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대내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고 병력감축으로 인한 잉여 무기를 처리해야만 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은 러시아의 무기기술 도입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구입은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병력을 감축하고 이로 인한 비용절감분을 장비 현대화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軍需産業의 民需産業으로의 전환을 통해 외국으로 부터 첨단무기 구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15) FBIS, *Daily Report, China*, December 21, 1992, p. 9.

자 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군수산업체 총생산액중 민수품 생산 비중은 56%에 달하며, 그 액수는 연간 약 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

중국은 1995년까지 군수산업체의 민수품 생산 비중을 8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군수공장 생산라인의 민수용 전환 촉진과 함께 민수화 분야를 핵·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핵 강대국인 미·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핵무기 감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91년 5월 대규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⁷⁾ 중국은 현재 「東風 4號」와 「東風 5號」 등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가 중국의 핵무기와 같은 정도로 감축되지 않는 한 핵실험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⁸⁾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중장기 목표가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데 있는 바, 계획대로 경제력을 신장시킬 경우 중국은 군사 무기·장비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증

16) 구소련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재래식 무기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한 1986년부터 중국은 군수공업의 군·민 결합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여 왔다. 군수산업의 민수화 추진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영기업의 재정적자(1992년 약 50억 달러)를 축소하고 현대화 무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vid Shambaugh, "In Shanghai's Busy Shipyards, a Warning About Chinese Mig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15, 1993.

17) 凌雪君, "鄧小平爲核爆辯護," 「爭鳴」, 1993年 1月號 (1993. 1), pp. 28-29.

18)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人民日報」, 1991. 10. 8; *New York Times*, January 31, 1992 등 참조.

강을 위한 행보를 더욱 적극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2000년까지를 제1단계, 2050년까지를 제2단계 해군력 정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육상발진의 중거리 항공부대와 공격형 잠수함을 주요 공격력으로 하고 헬리콥터 탑재 중형 수상 함정을 지휘·지원전력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제2단계에서는 경제력과 기술력 발전 정도에 따라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대공, 대함정,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갖춘 수상함정과 잠수함을 배비한 기동부대를 보유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계획에 입각, 중국은 1991년말 개최된 「全海軍工作會議」에서 21세기 초까지 중형 항공모함 2척을 자체 건조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⁰⁾ 또한 중국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러시아로부터 72대의 SU-27 전투기와 18기의 탄도미사일 시스템 및 3척의 그루지아급 잠수함을 구입할 계획이며, 미그 31기 생산라인을 도입할 것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군사력 증강에 요구되는 재원의 부족, 둘째, 일본과 미국 등 주변국의 우려와 견제, 셋째, 廣東省과 福建省 등 경제발전에 의해 혜택을 입은 지역과 국민의 요구(군사 보다 경제 중시) 등 때문이다.

19) 중국은 1989년 12월 [해군력 정비방침]을 확정하여 2050년까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구비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 「東亞日報」, 1993. 5. 14.

Ⅳ. 동북아질서에 미칠 영향

최근 중국이 남사군도와 조어대열도 등을 자국령으로 규정한 영해법을 제정하고, 파키스탄 등에 M-11 미사일 부품을 판매하고,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27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미얀마의 하인리히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들 조치는 모두 인도지나 등 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도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계획·추진하고 있는 군사현대화 작업도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지도부가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구입계획이 없고 중국의 군사력이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¹⁾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향후 주변국의 안보에 적지 않은 위협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계획하는 바대로 군사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중국은 아시아의 세력균형 변화를

21) 중국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롭고 안정된 주변환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최근 중국의 경제력 증강과 국방비 증액이 결코 역내 세력균형 변화를 초래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방비가 국민총생산중 1.6%, 국민 1인당 6달러(미국은 1100달러, 일본은 600달러)에 불과하고, 국방비 총액도 약 73억달러(미국은 2743억 달러, 일본은 377억달러)에 불과하여 중국군사력이 최소한도의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錢其琛, “錢其琛答記者問,” 「文匯報」(香港), 1993. 3. 24; 懷成波, “中國威脅論的背後,” 「文匯報」(香港), 1993. 2. 17; 穆惠民, “中國軍事威脅論毫無事實根據,” 「人民日報」, 1993. 4. 17; Qimao Chen,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33, no. 3 (March 1993), pp. 246-247.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역내국가간 마찰을 야기하여 지역정세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필리핀 주둔 미군 철수, 구소련 붕괴에 따른 미·러 대결 구도의 와해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역내세력균형 변화를 초래하는 잠재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도록 자극하고 대만의 무기 구입을 촉진시키는 등 역내국가간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 채택을 유도하고, 중·미관계 경색 등 중국과 주변국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唇齒關係」로 표현해 왔듯이, 중국과 한국은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중급 군사무기 지원 등 한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결국 역내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와 일본 등에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필요로 하게 할 것이다.

요컨대,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향후 중국은 자신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일본, 대만 및 동남아국가들로 하여금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태 진전은 동북아에 안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불안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중국내에서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는 세력이 대부분 보수성향을 지닌 인사들이다. 이와 관련,

역내국가들은 중국에서 개혁정책이 성공리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외 타협을 중시하는 개혁과 지도자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역내 문제를 다자적 방식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빈 면

韓半島 情勢現況과 展望

(요약본)

程玉洁
東亞研究室 助理研究員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미·소간 전략적 대립국면이 종결된 후 세계는 다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남북한간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10월 이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 한반도와 주변정세 현황

(1) 강대국간 군사대결 국면이 종식되고, 각국이 대내 경제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2)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새로이 등장하고, 일본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엘친이 대통령에 오르고, 중국에서 강택민이 국가주석에 선출되는 등 각국이 지도자 교체시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3) 각국간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방국

간 세계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국익보호를 위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일·유럽 3국이 서로 정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였고, 중국과 베트남도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 하였다. 북한과 일본간에도 수차에 걸쳐 수교교섭을 진행한 바 있고, 북·미간에도 30회 이상에 걸쳐 접촉한 바 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4대 강국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4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4) 남북한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주변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1989년부터 남북한은 각종 레벨에 걸친 회담을 진행해 왔다. 정부간 빈번한 접촉은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점차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직접교역이 시작된 이후 교역규모, 교역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1992년 10월 이후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고 있다. 1992년 12월 21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던 제9차 총리회담이 취소되었고, 북·일수교회담도 중단되었고, 북·미 접촉도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강경한 자세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제2단계 주한 미군 철수계획을 보류하였고,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였다. 북한 김일성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표명하는 동시에 1991년 12월 남한과 「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고,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결정, 6차례에 걸쳐 핵사찰을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일본과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 해결이전 수교나 관계개선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 북한은 3월 12일 NPT 탈퇴선언을 발표하였다. 결국 한반도에는 다시금 긴장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과정중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1)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고 대내경제문제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 (2)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함. 특히 남북한 관계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 등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남한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는 동시에, “남한내 미군기지 사찰허용,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중” 등 북한이 요구해온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미간 몇 차례의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되는데 대해 환영을 표하고, 한반도정세 완화와 남북한 관계 진전 및 남한과 주변 강대국간 관계가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핵

무기 확산을 계속 반대하여 왔고,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아울러 중국은 관련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왔다. 중국은 경제제재나 군사위협 수단 등 압력을 통한 무제 해결 방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압력수단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3. 사태 진전 추세

북한과 미국은 4차례의 직접접촉을 통해 6월 11일 3개항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되었으며, 한반도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북·미회담이 성공을 거둘 경우, 북한이 특별핵사찰을 수용하고, 남북한이 상호핵사찰을 실시하고,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이 영구 중단되고, 북한과 미·일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것이다. 반면, 북·미회담이 실패할 경우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결국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협상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북·미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주변국과 관련당사국들은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가 비핵지대화하기 위한 관건은 북·미간 협상, 특

히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셋째, 한반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문제는 남북 쌍방간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각국은 대내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관련 당사국들이 성의를 갖고 노력한다면 건설적인 방향의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빈 면

중·대만관계 현황과 전망

文 興 鎬*

◁ 目 次 ▷

I. 序 論	III. 中·臺灣關係의 展望
II. 中·臺灣關係의 變化 推移	IV. 結 論

I. 序 論

중국의 鄧小平體制 출범 이후 중·대만관계는 쌍방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요구, 주변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대립·갈등 등 일변도 관계에서 보다 완화되고 신축성있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一國兩制를 대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견지하고 있으나¹⁾ 그동안 비정치·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1)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992년 10월 12일 14全大會 政治報告와 1993년 3월 15일 8기 全人大 1차회의 政府工作報告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江澤民총서기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하에 국가의 根本體制는 社會主義制度를 견지하되 홍콩·마카오·대만의 資本主義制度를 장기간 유지하는 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

민간차원에서 이룩한 관계발전을 토대로 兩岸의 정치적 관계개선, 나아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대만도 교류 협력 초기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대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대만정부는 중국이 一國兩制를 고수하는 것처럼 三不政策 등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의 양안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대만정부의 대륙정책 변화는²⁾ 蔣經國 집권말기에 추진된 國民黨 주도하의 정치개혁과 1988년 1월 장경국 사망 이후 李登輝 중심의 국민당 권력구조 개편을 바탕으로 한 대내외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중·대만관계의 변화를 가속화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대만관계는 과거 「革命的完結」, 「臺灣의解放」이란 관점에서 대만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의 정책변화와 「反共」, 「本土收復」이란 관점에서 대륙정책을 추진해 온 대만의 정책변화가 접합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이 정치·이념적 요인보다 현실적 국익을 중시하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편승하면서 중·대만의 관계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통일 대업을 완수해야 한다”(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 「人民日報」, 1992年 10月 13日)고 강조하였으며, 李鵬총리 역시 1993년 3월 15일의 政府工作報告에서 “조속한 조국통일을 위해 평화통일, 一國兩制 원칙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人民日報」, 1993年 4月 2日.

- 2) 과거 대만정부는 중국의 무력적 위협,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는 최선책은 대만의 내부단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대만정부는 혁명시기 공산당과의 國共合作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적 피해의식 때문에 중국의 각종 제안을 不信·拒否함으로써 兩岸關係 발전여지를 철저히 봉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관계의 재정립 및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중·대만은 비정치·민간차원에서 획기적인 관계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곧 變化와 不變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중·대만관계의 주요 특징이다. 쌍방의 정치적 관계발전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란 기본원칙하에 中央과 地方의 관계로서 兩岸關係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반면, 대만정부는 대만의 政治的 實體 인정과 國際的 地位 保障 및 대만에 대한 중국의 武力使用 포기를 양안간 정치적 관계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중·대만관계의 최대 과제는 기존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쌍방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인 難題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중·대만관계의 이러한 변화 및 향후 발전방향은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중·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는 역사적 背景, 쌍방의 정치·경제적 條件, 국제적 地位 및 국제사회의 認識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중·대만의 관계변화는 기존의 정치·이념적 대립을 완전히 해소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발전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이념적 대립이라는 제약속에서 추진된 양안교류·협력의 成果, 교류·협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각종 問題點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한 쌍방의 움직임 등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注目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1993년 4월 27~2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汪辜會談」은 비정치적 현안을 논의한 半官

機構간 회담이라는 形式上的 制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중 대만정부의 의도가 反影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 中·臺灣關係의 變化 推移

1. 三通四流政策과 三不政策의 對立

중국이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1989. 1. 1)을 발표한 이후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기까지의 중 대만관계는 양안의 교류 협력 확대를 겨냥한 중국의 三通四流政策³⁾과 이를 거부하는 대만의 三不政策⁴⁾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여 왔다.

대만정부가 중국이 제시한 일련의 관계개선 제의를 철저하게 거부한 데에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만정부의 뿌리깊은 불신감과 함께 1979년 1월 1일의 美·中修交, 미·대만 방위협정 폐기 등으로 심화된 대만의 국제적 고립감, 안보상의 위기의식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대만정부는 鄧小平체제 출범 이후 중국이 대내적인 정치·경제 체제개혁과 더불어 국제적 지위를 신장시켜 나가는 반면,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계속 실추되는 상황에서 眞意를 파악할 수 없는 중국의 각종 제의에 응하기 보다는 대내적 안정 확보에

3) 三通四流政策의 三通은 通商·通郵·通航을, 四流는 경제교류·문화교류·과학기술교류·체육교류를 지칭한다.

4) 대만의 三不政策은 중국과의 不接觸·不談判·不妥協을 의미한다.

주력하였다.

중국이 11期 3中全會에서 대만문제의 해결방식을 종래의 무력적 해결에서 평화적 해결로 전환한 이후 대만에 제시한 대표적인 제의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이외에도 葉劍英의 「평화통일 9개 방침」(1981. 9. 30),⁵⁾ 鄧小平의 「조국통일 6개 원칙」(1983. 6. 26)⁶⁾ 등이 있다. 이들제의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① 대만문제의 平和的 解決, ② 대만정권의 존속과 自治權 인정, ③ 대만의 기존 사회·경제체제 및 주민의 生活方式 維持, ④ 대만의 軍事力 保有, ⑤ 黨對黨 談判을 통한 3차 國共合作 실현 등 대만문제의 해결방식 및 양안의 교류·협력문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
- 5) 葉劍英이 全人大 常務委員長 명의로 발표한 「평화통일 9개 방침」(關於臺灣回歸祖國實現和平統一之方針政策)은 兩岸의 三通四流를 강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차 國共合作을 위한 쌍방 대표의 파견, ② 通郵·通商·通航·친척방문·학술교류·문화교류·체육교류, ③ 特別行政區로서 대만의 自治權 및 軍事力 保有 허용, ④ 대만의 현행 社會 經濟體制, 生活方式의 보장 및 외국과의 經濟·文化關係 허용, ⑤ 臺灣當局者 및 각계 인사의 中央政府 참여 허용, ⑥ 대만의 재정근란시 中央政府의 財政支援 보장, ⑦ 대만주민의 大陸移住와 自由往來 허용, ⑧ 대만기업의 大陸投資 허용 및 合法的인 權益 利潤 보장, ⑨ 祖國統一을 위한 대만 각계 각층의 建議 환영. 「人民日報」, 1981年 10月 1日 참조.
- 6) 「조국통일 6개 원칙」은 1983년 6월 26일 鄧小平이 在美 중국계 학자 楊力宇 교수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조한 것으로서 통일 이후 ① 중국 軍事·政府要員의 대만파견 금지, ② 대만의 독립적인 立法權 및 現行 法律·司法機構의 유지, ③ 대만의 독자적인 軍隊 유지(대륙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④ 대만의 對外事務 처리권한 유지, ⑤ 대만의 特別旗幟 및 「中國臺灣」 칭호 사용, ⑥ 외국으로부터의 武器購入을 포함한 대만의 自衛權 허용 등이다. 그러나 1983년 7월 29일 新華社의 공식보도에서는 제6항 대만의 武器購入과 自衛權 허용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鄧小平의 「조국통일 5개 원칙」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楊力宇, 「鄧小平對和平統一之最新構想」, 「七十年代」, 1983年 8月號, pp. 17~19 참조.

중국의 이러한 제의에 대한 대만정부의 반응은 중국이 제시한 일련의 대만정책이 ‘평화를 위장한 統一戰線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즉 대만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과 대만정부를 단순히 地方政府로 간주하는 중국의 문제해결 방식은 결국 대만을 파괴·흡수하기 위한 政治的 陰謀라고 일축했다.⁷⁾ 또한 대만정부는 黨對黨 담판 등 중국의 각종 제의에 응하는 것은 대만 스스로 지방정부임을 自認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어떠한 형태의 접촉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중국의 각종 제의를 철저히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대륙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平和攻勢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內部動搖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대만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국민당 제 12차 全國代表大會를 통해 「삼민주의에 의한 중국통일 방안」(貫徹以三民主義統一中國案)⁸⁾ 을 통과시킨 이후 중국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① 政治的 民主, ② 經濟的 平等, ③ 社會的 多

7) 蔣經國, 孫運璿 등 당시 국민당 수뇌부는 중국이 양안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臺灣問題」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즉 이들은 “中國問題만이 존재할 뿐 臺灣問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모든 接觸·談判·妥協을 거부하는(소위 三不政策) 것만이 중국의 政治的 陰謀를 봉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蔡政文, 林嘉誠, 「臺海兩岸政治關係」(臺北: 國家政策研究資料中心, 1989), pp. 132~133 참조.

8) 이 결의안은 ① 三民主義의 신봉, ② 自由·民主·均富의 新中國 建設, ③ 民主憲政의 실천, ④ 中華文化的 復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元化를 중국 전역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三不政策은 臺灣이 大陸과 分離되어 敵對·戰爭狀態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國家의 安全, 社會의 安定을 수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⁹⁾라는 논리로써 三不政策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1979년 이후 대만정부는 三不政策을 내세워 중국의 각종 제의를 철저히 거부했고 자신들의 입장에 기초한 對應論理를 강화함으로써 중·대만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만내에서는 정부의 대륙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¹⁰⁾ 또한 대만정부도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대만내의 비판적인 여론과 민간차원에서의 인적 교류, 경제교류 등 三不政策의 이탈현상을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2. 非政治·民間次元의 交流·協力 擴大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폐쇄적인 대륙정책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이에 대한 대만내의 비판이 고조되자, 대만정부는 대륙정책을 포함한 대내외정책의 전반적인 조정을 시도하였다. 대만정부의 대내외정책 전환 의지가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87년 10월의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 조치이며 이는 양안의

9) 蔡政文·林嘉誠, 「臺海兩岸政治關係」, p. 136 참조.

10) 당시 대만정부의 대륙정책에 대한 대만내의 비판은 주로 三不政策에 집중되었는데 비판의 핵심은 ① 三不政策으로 인해 대만이 지나치게 피동적인 입장에 처했으며, ② 양안의 交流·接觸이 없이는 三民主義 實踐의 經驗·成果를 大陸에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三民主義에 의한 中國統一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인 인적 교류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양안관계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한 이후 1991년 3월 國家統一綱領을 공포하기까지의 기간에는 비록 정치적 차원의 접촉은 배제되었으나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중대만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당시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른 국민당지도부의 認識變化 및 政治改革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蔣經國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지도부는 1986년 3월 29일의 국민당 제12기 3中全會를 전후하여 당내 권력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1949년 이후 정치활동을 규제하여 왔던 야당 설립 금지조치 철폐(1986. 9. 28), 戒嚴令 해제(1987. 7. 14) 등 대륙정책 전환에 대비한 대내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¹¹⁾ 이러한 정치개혁의 바탕위에서 대만정부는 ① 反共政策의 불변, ② 國家安全의 確保 및 중국의 統一戰線 억제, ③ 傳統倫理 및 인도적 입장의 견지라는 3개 원칙을 전제로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였다.

친척방문을 통한 인적 교류는 자연히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다각적인 양안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양안관계를 기존의 단절·고립된 관계에서 교류·협력의 관계로 변모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더욱이 1988년 1월 蔣經國의 사망과 李登輝의

11) 당시 대만이 대내적으로 政治改革을 추진했던 주요 배경으로는 대륙정책의 전환을 위한 事前 對備라는 측면 이외에 ① 政治民主化 요구의 제한적 수용, ② 對美關係를 비롯한 대외관계의 재정립, ③ 蔣經國 후계체제를 위한 권력구조 조정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총통직 승계 이후 대만정부의 대륙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양안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중국정부는 대만정부의 대륙정책 전환에 환영을 표하고 양안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였다. 대만정부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양안의 관계변화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1988년 7월 「대륙정책안」(中國國民黨現階段大陸政策案)을 마련하였다. 중국과 대만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록 자신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계기로 양안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다만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일정한 범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李登輝의 총통직 승계 이후 대만정부의 대내외정책이 능동적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대륙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대만의 정책변화가 양안교류·협력의 촉진과는 별도로 대만의 국제적 지위 신장, 더 나아가 대만의 獨立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李登輝정부가 대만의 국제적 지위 강화와 관련된 「彈性外交」, 「雙重承認」 등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의 불만이 가중되었다.¹²⁾ 대만 역시 양안의 교류·

12) 중국지도부는 자신들이 국민당 제2세대들이 집권하기 전에 국민당 혁명1세대들과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중국지도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宦國蒼, “北京調整對臺政策,” 「九十年代」, 1986年 3月號, pp. 44~47 참조). 따라서 중국은 蔣經國的 사망으로 대만 출신인 李登輝가 총통직을 승계하자 국민당의 「臺灣化」, 臺灣獨立主義者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대만 내의 독립요구가 더욱 고조될 것을 우려하였다.

협력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三不政策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안의 교류 협력을 비정치 민간차원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¹³⁾

결국 이 기간의 중·대만관계는 중국의 거둬들인 교류·협력 제의에 대만정부가 비록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에 응함으로써 비정치·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반면, 중 대만의 정치적 관계설정, 평화정착, 통일정책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침체한 대립을 지속하는 불균형적인 관계발전 양상을 보였다.

3. 交流·協力の 制度化 및 政治的 關係改善 모색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대만관계는 기존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정치·비정치분야, 정부·민간차원을 철저하게 분리했던 기존 교류·협력방식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즉 대만의 海峽交流基金會(1990. 11, 「海基會」로 약칭)와 중국의 海峽兩岸關係協會(1991. 12, 「海協會」로 약칭)가 설립되어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仲裁機構로서의 役割을 시작했다. 또한 黨對黨 會談 제의, 불가침협정 제의 등 그 어느 때보다

13) 즉 당시 대만정부는 대륙정책 추진과정에서 國家의 安全·社會의 安定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각종 교류 협력의 利得과 弊弊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며 결코 낭만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蔡政文·林嘉誠, 「臺海兩岸政治關係」, p. 155 참조.

도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대만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대륙 정책에 기인하는데, 대만정부가 적극성을 보이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① 6.4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정국의 혼란, ② 소·동구의 붕괴, ③ 독일의 통일 등으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대만정부의 자신감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만정부는 總統府 직속의 國家統一委員會(1990. 10), 行政院 산하의 大陸委員會(1990. 10) 등을 설립하고 체계화된 統一指針으로서 「國家統一綱領」¹⁵⁾을 제정하였다. 또한 대만정부는 1949년 이후 대만의 정상적인 憲政을 제약해 온 「動員戡亂時期」의 종식을 선언하고 양안교류 협력을 총괄하는 「臺灣地區·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14) 대만정부는 교류·협력 제도화 및 이를 위한 중국과의 접촉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도 三不政策 고수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현실적 요구와 정치적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대대적인 변혁,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주요 서방국가들의 對中政策 변화 움직임 등은 理念·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대만주민·지도부의 자신감을 고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대만정부의 대륙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5) 대만의 「國家統一綱領」은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협상에 의한 平和統一 견지 및 分離主義 반대, ② 쌍방의 政治實體 및 統治權의 독립 승인(즉 主·客, 中央·地方으로의 구분을 배격), ③ 「唯一合法的 代表權」에 대한 편견 포기 및 國際舞臺에서의 平和共存 실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안의 통일이 단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통일정책 추진과정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短期目標: 대만의 政治的·實體 확보, 民間交流의 확대, 중국의 政治·經濟改革 유도,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및 平和共存 실현. ② 中期目標: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접촉통로 확립, 兩岸의 전면적인 三通 실현. ③ 長期目標: 통일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추진. 黃昆輝, 「國家統一綱領的要旨與內涵」, 「中國大陸研究」, 第34卷 12期(1991年 12月), pp. 5~9 참조.

(1992. 7, 「人民關係條例」로 약칭)¹⁶⁾를 공포함으로써 중국과의 敵對關係 청산 및 대륙정책 전환 의지를 보였다. 특히 「國家統一綱領」과 「人民關係條例」는 대만정부가 기존의 비현실적 수세적인 대륙정책을 지양하고 향후 새로운 차원의 양안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事前準備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대만의 「國家統一綱領」과 「人民關係條例」 공포를 계기로 중·대만관계는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했으며, 1993년 4월 海協會 汪道涵會長과 海基會 辜振甫會長의 「汪辜會談」은 중·대만관계의 질적 변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다.

Ⅲ. 中·臺灣關係의 展望

1979년 이후 중국과 대만은 자신들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기초하여 양안관련 정책을 전환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전환은 결국 쌍방의 관계변화를 야기했다.

앞으로의 중·대만관계 역시 통일 및 양안관계에 대한 쌍방의 인식 변화, 중·대만의 정치변동 및 대외관계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 성과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중·대만관계가 비교적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비정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단계를 거쳐 교류·협력의 제도화,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 때문에 關係變

16) 「人民關係條例」는 총 6장 9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안관계와 관련된 行政, 民事, 刑事, 罰則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통일 이전에 대만지구의 安全과 주민의 權益·福祉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往來를 規範化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化의 樣相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와는 달리 교류·협력의 제도화,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쌍방의 정치적 입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립·갈등이 야기될 수 때문이다.

1. 兩岸의 三通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교류·협력이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三通的 추진에 관해서는 아직도 근원적인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 중·대만의 교류·협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의 삼통을 불허하는 대만의 정책은 그 실효성보다는 다분히 政治的·象徴的인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중·대만의 경제교류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안의 경제교류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通商 불허라는 대만정부의 제한조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양안의 通郵(우편물 교환)문제에 있어서도 대만정부의 제한조치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1993년 4월의 「汪辜會談」에서 중·대만이 합의한 「양안 등기 우편물 조회와 유실물 보상 협의」에 따라 양안의 우편물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양안의 三通 중에서 通商과 通郵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당부분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양안간 교류·협력의 진일보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양안의 通航(선박·항공기의 직항로 개설)과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은 양안의 通商, 通郵가 상당부분

해결되었다는 인식하에 양안의 通航을 급선무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만정부의 정책전환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양안의 通航문제와 관련하여 1993년 4월 19일 「海峽兩岸航運交流協會籌備處」를 설치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첫째,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交通部, 口岸(港灣)관공실, 公安部, 海關總署(關稅廳) 등의 관련자들로 구성된 「兩岸海上直航考察組」를 조직하여 중국 동남연안의 각 항만·공항을 직접 시찰하도록 했다. 둘째, 上海市, 福建省, 廣東省 등의 省級 대만사무관공실에 양안의 직항로 개설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셋째, 港灣, 港口의 시설확장과 관련하여 ① 福建省의 福州, 廈門, 泉州, 東山, 湄州灣의 島嶼에 12개소의 선박 정박지를 지정하여 海上直航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② 廈門의 高崎 국제공항의 확장, 長樂 국제공항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¹⁷⁾

중국이 양안의 통항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만의 반응은 아직도 부정적이다. 즉 중국의 三通 요구에 대해 대만정부는 ① 三通을 구실로 「國家統一綱領」에서 설정한 대륙정책 추진 단계의 혼선을 야기하고자 한다, ② 민간차원의 교류를 정부차원의 교류로 확대하고, 三通을 통해 統一을 촉진하고

17) 兩岸의 通航과 관련하여 省級 대만사무관공실이 제출한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안의 直航은 雙方交流, 平等互利를 원칙으로 하되 外國 혹은 第3國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둘째, 양안의 직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양안의 협상을 통해 航路, 運輸手段, 事務處의 상호설치를 협의하고, ② 福州, 廈門, 湄州島를 일차 直航地域으로 개방하고 항만시설을 확대하며, ③ 대만주민, 화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는 중국의 현행 「口岸管理規定」에 따라야 한다. 黃昆輝(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 “中共急於三通, 研擬兩岸直航方案,” 「中央日報」, 1993년 5월 8일 참조.

자 하는 소위 「以民逼官」, 「以通促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③ 중국이 양안의 직항에 외국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직항문제를 국내문제로 기정사실화하려는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만정부는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 무력사용 포기, 대만의 각종 법률을 승인하는 조건하에서만 양안의 통항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⁸⁾

이처럼 양안의 통항문제는 중국의 적극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정부가 조건부 통항 허용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양안의 통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대만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중국의 각종 요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만내의 여론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안의 통항에 대한 대만내의 여론은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현재의 間接的인 通航을 계속 固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論旨는 ① 중국은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양안의 직항을 주장하고 있다. ② 현재 중국의 각종 조치, 항만설비 등은 양안의 직항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 ③ 현재의 상황에서는 직항을 위해 필요한 쌍방의 합의·양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⁹⁾ 둘째, 條件附 直航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대만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

18) 「中央日報」(대만), 1993年 5月 8日.

19) 高長, “兩岸直航期短內乃難突破,” 「聯合報」, 1992年 6月 7日 참조.

이나 條件의 範圍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⁰⁾ 셋째, 無條件 直航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과의 무역·투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중에서도 두번째의 의견이 비교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만내에서는 조건부 직항을 추진하되 조건의 범위를 융통성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양안의 통항문제는 대만정부가 제시하는 선결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대만 모두 통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각자가 이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직항형태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통항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 대만은 1993년 5월 25~26일 양일간 上海에서 쌍방의 항공·운수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안 민항·운수 토론회」(兩岸民航運輸研討會)를 개최하였는데 양안의 통항과 관련된 많은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양안의 직항을 위한 항공기의 國籍標識, 航路, 비행 정보구역, 항공관제선, 통관절차 등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였으나, 직항 실현 이전에 우선 대만측에 부정기 전세기 취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중국의 「中國民用航空協會」와 대만의 민간항공사를 중심으로 直航路開設과 관련된 事案을 계속 협의한다는데 합의하였다.²¹⁾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양안의 통항은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便

20) 즉 대만정부와 같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 무력사용 포기 등을 직항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기존의 조건을 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趙建民, “從直航的爭議看當前兩岸交流問題,”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3期(1993年 3月), pp. 16~17 참조.

21) “中共提臺灣包機不定期飛大陸方案,” 「中央日報」, 1993年 5月 28日 참조.

法으로 우선 간접적인 통항의 수준을 점차 높힘으로써 直航에 접근해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兩岸의 政治的 關係設定과 대만의 國際的 地位

쌍방의 정치적 관계설정을 둘러싼 중·대만의 대립은 곧 양안관계를 中央政府와 地方政府的 관계로 규정하려는 중국정부와 대등한 정부간의 관계로 설정하려는 대만정부의 근본적인 입장차이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 문제는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정부는 기존의 수세적·피동적인 외교정책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고립과 외교정책상의 행동반경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식하에 대외정책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는 대만정부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포함한 각국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소위 雙重承認 유도) 각종 국제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만의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彈性外交 정책을 의미한다.

1988년 당시 대만의 외교부장으로서 彈性外交 필요성을 역설한 대표적인 인물인 連戰이 1993년 3월 1일 대만 行政院長으로 취임하면서 최근 대만정부의 탄성외교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連戰은 1993년 2월 20일 행정원장 임명과 관련된 대만 立法院에서의 청문회를 통해 “중국을 공식 승인한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雙重承認」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李登輝총통 역시 1993년 4월 9일 國民大會에서의 연설을 통해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가입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²²⁾ 또한 이등회총통은 1993년 5월 20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의 유엔가입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²³⁾라고 역설했다. 그밖에 최근 대만정부는 대만의 외교적 입지강화와 관련하여 달라이 라마(Dalai Lama)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와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즉 1993년 5월 티베트 망명정부의 각료들이 대만을 방문한 바 있으며, 李登輝총통은 5월 20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달라이 라마가 대만방문을 원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티베트 망명정부는 대만정부가 티베트의 自決權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달라이 라마의 대만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만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²⁴⁾

국제적 지위확보를 위한 대만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정부의 유엔가입

22) “李總統：要積極爭取參與聯合國,” 「中央日報」, 1993年 4月 10日; “Twixt handshake and armlock,” *The Economist*, May 22, 1993, pp. 29~30 참조.

23) 대만지도부의 유엔가입 의지 천명과 함께 대만외교부는 「中華民國參與聯合國」이라는 小冊子를 발간하여 대만주민들에게 유엔가입의 필요성을 弘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대만외교부는 대만의 유엔가입 필요성, 가입절차, 문제점 등을 홍보하는 동시에 대만국민들이 각종 기회를 통하여 대만의 유엔가입 의지와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전달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中華民國參與聯合國」說明書,” 「中央日報」, 1993年 5月 19日; 施若彬, “臺灣重返聯合國的實際行動,” 「爭鳴」, 1993年 6月號, pp. 87~88; Julian Baum, “Virtual Reality: Moves to rejoin UN, recognise Mongoli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p. 15 참조.

24) Hamish McDonald, “The Tibetan Connection: Taipei finds an ally in the Dalai Lam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p. 12 참조.

및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관계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입장은 “대만정부의 최근 외교 행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여 궁극적으로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²⁵⁾는 것이다.

한편 대만의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海協會」汪道涵회장과 唐樹備부회장은 1993년 6월초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면 유엔에서의 地位를 중국과 함께 公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 역시 대만의 의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중·대만이 유엔에서의 지위를 공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받음으로써 독립된 國際的 地位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²⁶⁾

25) 대만의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 중국외교부 吳建民 대변인은 1993년 4월 29일 중국의 공식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유엔은 主權國들의 조직으로서 중국의 일부본인 대만은 가입자격이 없다. ②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一中一臺」를 조장하여 중국의 분열상태를 장기화하려는 것이다. ③ 이는 中華民族의 근본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대만동포를 포함한 中國人民 모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人民日報」, 1993년 4월 30일. 또한 중국은 라사(拉薩, Lhasa)를 중심으로 티베트 독립시위가 고조되고, 달라이 라마가 클린턴 미대통령, 허드(Douglas Hurd) 영국외상을 방문하는 등 티베트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incoln Kaye, “Raging Inflation : Lhasa price protests escalate into anti-Chinese rio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p. 13 참조.

26) 「明報」(홍콩), 1993년 6월 7일 참조.

이처럼 정치적 실체 확보 및 국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대만정부의 노력은 중국의 초강경 반대입장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자신도 지도부내의 의견대립 해소, 국제적인 여론의 환기 등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간내에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만정부는 표면적으로 유엔가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선 GATT, OECD 등 주요 국제가구에 가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보다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중국 역시 대만이 주요 국제조직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①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② 국제기구의 가입을 「두개의 중국」 실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③ 적절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⁸⁾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만이 유엔가입을 통해 정치적 실체를 인정받고 독자적인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만이 각종 국제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만의 국

27) 즉 대만정부는 유엔가입과 관련, 外交部의 特別豫算을 편성하고 北美事務協調委員會의 「聯合國工作小組」, 행정원의 「行政院聯合國工作小組」, 總統府 산하의 「聯合國工作委員會」를 新設하는 등 유엔가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단기적인 정책목표는 우선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각종 국제기구 가입하여 국제적 지위를 신장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外交部長 錢復도 미국 방문중 1993년 5월 24일 시카고 外交關係協會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만이 확고한 意志와 目標을 가지고 유엔가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단기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錢復, “中和民國快速民主化下外交事務發展的經驗,” 「中央日報」, 1993년 5월 27일 참조.

28) 中國外交部 聲明, 「中央人民廣播電臺」(北京), 1993년 6월 1일 12:00 뉴스 참조.

제적 역할 지위를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兩岸의 平和定着

중·대만간의 평화정착 문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만정부의 무력사용 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
면서도 1979년 1월 당시 중국의 국방부장 徐向前이 金門島·馬祖
島 등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대륙인점 島嶼에 대한 포격 중지를 선
언했을 뿐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이등회총통이 1991년 연두회견을 통해 대만과 인접한 福建
省의 병력 철수를 요구하자 복건성지역에는 治安維持를 위한 소수
의 병력을 제외하고 戰鬥兵力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
을 뿐이다.²⁹⁾

이처럼 중국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만에 대한 무력적 위협을 대만의 獨立 움직임을 牽制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최근 대만정부의
외교행태가 단순히 대외적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
는 수준을 넘어서 유엔가입 추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만의 독
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
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마저 포기할 경우 대만의

29) 1991년 9월 24일 楊尚昆의 대만 「中國時報」 기자회견, “海峽兩岸關係座談會,”
「爭鳴」, 1992년 11월號, p. 86 참조.

外交攻勢를 제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이 더욱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중국의 대만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거나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一國兩制」 원칙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현상 상황에서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선언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선언과는 별개로 중·대만의 평화 정착 문제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즉 중국이 지도부의 聲明 혹은 決議文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형식을 통해 양안의 평화정착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대만 공히 양안의 敵對關係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만은 1992년 5월 「動員勘亂時期」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중국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표명했으며 중국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³⁰⁾ 둘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감행할 경우 중국 역시 막대한 정치·경제적 손실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³¹⁾ 또한 중국은 홍콩반환협상을 둘러싼 영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홍콩의 경제가 퇴보하는 것

30) 중국의 「海協會」 汪道涵회장은 1993년 5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안의 敵對關係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汪道涵은 양안의 相互不可侵條約의 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는 정치적인 과제이며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 정치협상·회담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汪道涵, “兩岸敵對關係幾可稱爲「已不存在」”, 「中央日報」, 1993년 5월 30일 참조.

31) 이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岳賽, “加入聯合國的奇想：臺灣外交動向觀察”, 「開放雜誌」, 1993년 5월號, pp. 86~87 참조.

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대만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셋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 대한 주변국가들의警戒心이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이들 국가의 관계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日本, 美國 등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를 겨냥하여 「中國威脅論」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킬 경우 중국 스스로 중국위협론을 정당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그치지 않고 역내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성을 통해 대만의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최근 대만정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美·佛·獨 등 주요 서방국가의 대만에 대한 武器販賣 구실을 제공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³²⁾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양안의 평화정착문제는 중·대만의 相互不可侵條約 체결 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武力使用 拋棄 선언과 같은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 역시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限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양안의 평화정착 문제는 중국이 間接

32) 李登輝총통은 1993년 3월 26일 미국 CNN과의 회견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은 「假想敵이 없는 集團安全保障體制」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中央日報」, 1993年 4月 2日)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대만의 安保를 아태지역의 집단안전보장체제와 연계시키려는 대만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중·대만관계의 현실상 대만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集團安保協力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주요 서방국가들의 對臺灣 武器販賣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의 非公式的으로 무력사용 포기를 선언하거나 무력사용 포기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³³⁾

IV. 結 論

1979년 이후 중·대만관계는 대립·갈등시기,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를 거쳐 정치적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중·대만의 이러한 관계변화를 촉진한 주요 요인은 중국과 대만의 정치·경제적 변혁이며 사회주의권 변화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또한 이들의 관계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의 중·대만관계 역시 중·대만의 정치·경제적 변화 및 주변 국제정세 변화와의 밀접한 관련속에서 변화할 것이나, 기존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기존의 중·대만관계 발전은 정치·비정치분야를 철저히 분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쌍방의 첨예한 政治的 對立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대만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이미 정치적인 제약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최고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정치·비정치분야의 불균형적인 관계발전을 더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며 만약 정치적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각종 문제들이 돌출됨으로써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마저 제약받게 될 것이

33) 예를 들어 중국 「海協會」汪道涵회장은 1993년 5월 30일 미국 와싱턴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과 관련, “중국은 一國兩制에 의한 平和統一을 추구하고 대만에 대한 武力使用은 ① 대만의 獨立 추구, ② 대만 문제에 대한 外勢介入 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中央人民廣播電臺」(北京), 1993년 6월 1일 06:30 뉴스 참조.

다.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은 현상황에서 悲觀도 樂觀도 할 수 없으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정치적 관계발전의 긍정적인 요인은 중·대만 모두가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 내지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확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안간 경제교류·협력의 지속적인 확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양안의 경제교류·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政治的 對立을 완화함으로써 양안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만문제 해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통해서 경제교류·협력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만내의 독립분위기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대만 역시 기존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특히 경제교류에 대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자신들의 향후 정치적 위상 설정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대만은 궁극적으로 統一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獨立을 추구할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李登輝, 連戰을 정점으로 한 대만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즉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汪辜會談」을 통한 중국과의 준정부간 접촉 定例化 합의, 중국 「海協會」와 대만 「海基會」 대표부

의 상호설치 추진, 양안간 通航의 긍정적 고려 등 기존의 三不政策과 三通 不許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강화하고 있다.³⁴⁾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대만간에는 정치적 관계발전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중국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政治變動 및 經濟政策의 변화 가능성이다. 중국은 14全大會, 8기 全人大 1차회의를 통하여 등소평 후계체제로서의 江澤民體制를 공고히 하고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經濟過熱, 지도부내의 갈등 등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 중국지도부내의 일부 갈등은 과거 첨예화되었던 당내의 保革 葛藤과는 양상이 다르며 경제과열 현상 역시 중국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확신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대만의 경우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요인은 李登輝총통의 정치적 位相變化 및 대만내 독립분위기의 고조 현상이다. 그동안 이등휘정부의 혁신적인 대륙정책, 대외정책은 중·대만관계 변화의 촉진제로 작용하여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의 독립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중국

34) 李登輝, 連戰體제의 향후 대륙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海基會부회장 丘進益은 “향후 3년간 李登輝政府의 가장 중요한 施政目標은 양안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정부는 최대한의 人員과 方案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宋克寒, “李登輝「務實」的兩岸關係展望,” 「鏡報」, 1993年 4月號, pp. 82~83 참조.

의 불만을 야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務實」에 바탕을 둔 이등휘정부의 융통성있는 대내외정책이 양안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대만내의 독립추구 경향을 부추김으로써 양안관계 발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만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겨냥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외교공세가 주요 서방국가들의 對中關係, 對臺灣關係와 연계될 경우 중 대만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³⁵⁾

이처럼 중·대만관계에는 쌍방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는 반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요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제거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왜냐하면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은 쌍방의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서처럼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는 대만정부가 요구하는 대만의 政治的 實體 및 國際的 地位 보장, 중국의 對臺灣 武力使用 拋棄를 통한 平和定着 등의 정치적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관계도 아니고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도 아닌 매우 애매한 「兩岸關係」를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쌍방의 限界와 制

35) 중국은 兩岸關係가 이와 같이 발전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Yan Xuetong, "China's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5(May 1993), pp. 4~5 참조.

約要因에 집착하기 보다는 서로의 共感帶를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중에는 비정치·민간차원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形式과 節次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정치적 접촉의 확대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Workshop 참가자 명단〉

본원측 : 尹炳益 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文興鎬 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申相振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崔春欽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중국측 : 徐 淡(Xu Dan)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副所長
陳 莊(Chen Zhuang)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亞洲太平洋研究項目 主任
俞曉秋(Yu Xiaoqiu)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對外政策研究中心 副秘書長
程玉浩(Cheng Yujie)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東亞研究室 助理研究員

韓 · 中 워크샷 회의 일정

1993. 6. 29 (화)

- 10 : 00-10 : 05 원장 개회사
- 10 : 05-12 : 00 제 1 회의
 주 제 : 중국의 개혁 · 개방 : 문제점과 전망
 사 회 : 文 興 鎬
- 10 : 05-10 : 25 俞 曉 秋 「중국의 개혁 · 개방 : 정치 · 경제」
 10 : 25-10 : 45 崔 春 欽 「중국의 개혁 · 개방과 대외정책」
 10 : 45-10 : 55 휴 식
 10 : 55-12 : 00 토 론
 12 : 00-14 : 00 중 식
- 14 : 00-16 : 00 제 2 회의
 주 제 : 중국의 개혁 · 개방과 동북아 질서
 사 회 : 徐 澹
- 14 : 00-14 : 20 陳 莊 「중국의 개혁 · 개방과 동북아 경제질서」
 14 : 20-14 : 40 申 相 振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동북아 안보질서」
 14 : 40-14 : 50 휴 식
 14 : 50-16 : 00 토 론

1993. 6. 30(수)

- 10 : 00-12 : 00 제 3 회의
 주 제 : 중국의 개혁 · 개방과 통일문제
 사 회 : 陳 莊
- 10 : 00-10 : 20 程 玉 洁 「중 · 북한관계 현황과 전망」
 10 : 20-10 : 40 文 興 鎬 「중 · 대만관계 현황과 전망」
 10 : 40-10 : 50 휴 식
 10 : 50-12 : 00 토 론
 12 : 00-14 : 00 중 식
 14 : 00-16 : 00 종합토론
 사 회 : 申 相 振

中国的改革开放：经济与政治

俞曉秋
副秘書長
對外政策研究中心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1992年春，邓小平南巡，视察了中国目前发展最快、最富裕的沿海省份深圳、珠海、上海等地。期间，他就如何进一步推动中国的改革开放发表了一系列新的政策性、方向性的重要谈话。1992年10月举行的中国共产党第十四次全国代表大会上，江泽民总书记的政治报告明确地把邓小平提出的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作为中国改革开放的今后方向与基本目标，确立了邓小平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理论作为中国改革开放的指导思想与基本理论。与之相应，在今年3月召开的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上，李鹏总理的政府工作报告提出了加快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改革步伐的政策措施，和进行与建立市场经济体制、促进经济发展相配套的行政管理体制和政府机构的改革，并修订了“八五”计划中国国民经济增长速度指标，由年均6%调高到8—9%。在这两次重要的会议上，党和政府最高决策层的人事布局也作了较大幅度的变动，并对政府行政管理体制机构进行了一些调整和精简。这一切标志着中国改革开放进程发生了一个根本性的转折，进入了一个新的历史阶段。

中国当前改革开放的新发展以及未来走向今世人注目，它将会对东北亚、整个东亚乃至西太平洋沿岸地区及国家间的政治关系、经济合作与安全结构的未来趋向产生极其重要的影响，并将在21世纪

的全球政治经济新秩序的形成过程中发挥更为积极的作用。

改革开放的理论

改革开放是一项巨大的经济、政治及其文化变革的复杂的社会工程，必须有相应的理论政策来加以确定其变革的方向、步骤、速度和方法。邓小平的改革开放与社会主义现代化思想理论深刻地影响了中国的改革开放与现代化建设的进程。了解邓小平的社会主义改革开放与现代化建设的思想，对于分析和理解中国改革开放与现代化的进程、特点和未来的发展方向，是非常重要的。中共“十四大”把邓小平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基本理论概括为九个方面，其中最主要的是由这样三个相互关联的部分构成：对社会主义重新加以认识的思想；中国现代化战略目标思想和社会主义市场经济的思想。

邓小平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理论的核心是，强调解放思想、实事求是，从中国的历史、国情与具体的实际问题出发，创造性地建设社会主义，进行改革开放，实现现代化；在改革开放和实现现代化过程中，要坚持“一个中心、两个基本点”（“经济建设”为中心、“改革开放”和“四项基本原则”两个基本点）。因此，鉴于建国以来社会主义建设的历史经验教训和苏联解体、东欧剧变，邓小平提出对社会主义重新认识的思想，其基本内容主要有三点：社会主义必须要有高度发达的社会生产力，要加快经济建设的发展速度；社会主义必须实现共同富裕的目标；社会主义必须加强民主和法制建设。中国现代化发展的战略目标是邓小平在1979年末提出来的，它是一个70年、分三步走的中国社会总体发展的基本目标，即到80年代末实现翻一番基本解决温饱、到本世纪末再翻一番进入小康社会，

到下个世纪中叶再翻两番把中国建成一个国际上中等水平的发达国家。要实现现代化，就必须进行改革开放，它是促进中国社会主义经济发展的唯一途径。在实现这一战略目标过程中，有四点是非常重要的：一是要抓住机遇，不能错过。所谓机遇，就是指能够推动中国经济迅速发展的国内外有利时机；二是要加快经济的发展速度，争取几年就使国民经济发展上一个新的台阶；三是要进一步扩大对外开放，促进国际经济的交流、合作与竞争；四是在政策措施上要更大胆，有新的突破。

因而，“社会主义市场经济”的提出，是中国改革开放与现代化理论和实践深化的必然结果。“社会主义市场经济”概念有这样几层含义：一是彻底摒弃仿效苏联模式的传统的计划经济体制，也摆脱了在计划与市场关系之间折衷的困境。市场经济是中国实现现代化的必由之路。二是进入国际市场、向国际惯例靠拢，实现与世界经济体系接轨，使中国经济成为世界经济体系中的一个有机的重要组成部分。市场经济的全球一体化是一个必然的趋势。三是社会主义是可以与市场经济结合在一起的。社会主义市场经济意味着不会实现经济的全面私有化，即不会搞西方式的自由市场经济；国家必须对经济进行宏观调控和计划指导，实现国民经济的稳步有序的发展以及社会公正、平等与共同富裕。事实上，以公有制为主的多种所有制是可以相互并存、竞争和互补的。五是向市场经济体制转变基本思路和途径是，建立责任明晰的产权关系；减少政府的行政干预，让企业自由地进入各种市场、展开竞争；以及解除对价格的管制，让市场决定价格。由此可以说，社会主义市场经济是具有中国特色的“市场经济”模式构想。当然，它的发展与最终成型还有赖于这方面的实践与努力，并且东亚一些国家和地区以及西方国家市场经济中

的一些有用的管理体制，法规和运作手段是值得我们参考和采借的。总之，随着改革实践的不断深化，中国在改革开放的总体理论上将会越来越成熟完备。

经济改革与对外开放的新格局

自1978年以来，我国的经济体制改革与对外开放取得了巨大的成就。1979年—1992年的13年间，国民生产总值的增长速度达到年均8—9%。(1)其中，1978—1987年这10年的发展速度为最快。工农业生产总值分别达到13806亿元和4676亿元，年均增长率分别为11.9%和6.6%；进出口贸易总额达到827.3亿美元，年均增长率为16.7%；实际引进和利用外资总额为376.86亿美元，“三资企业”近一万家；乡镇企业总数增加到157.9万个，从业人员4702.5万人；个体企业和私营企业达1372.5万户，从业人员2000万。(2)第三产业发展迅速，1990年的产值和人数达到4946.9亿元和10533万人，比1978年的824.5亿元和4869万人分别增长5倍和1.2倍。(3)在服务、商业批发零售行业，集体、个体和私营的比重约占84%。(4)随着经济改革和对外开放的深化，所有制结构发生了较大的变化。目前我国经济成份已确定的有8种类型：国有经济、集体经济、私营经济、个体经济、联营经济、股份制经济、外商投资经济和港台澳投资经济。在对外开放方面，80年代迈出了四大步：一是在1980年对广东、福建两省实行特殊政策、灵活措施，建立4个经济特区；二是在1984年开放了沿海14个城市和海南行政区(现海南省)；三是在1985年又把长江三角洲、珠江三角洲、闽南地区确定为沿海开放地带；四是从1988年起实施沿海地区经济发展战略。

经过3年“治理整顿”和稳步发展，在邓小平南巡讲话的有力推动

下, 1992年中国经济增长率达到12.8%, (5)国民生产总值接近24000亿(人民币), 象广东省等个别地方的经济甚至达到15%左右。与上一年相比, 工业、农业和第三产业的增长率分别为20.8%、3.7%和9.2%。在全部工业中, 集体所有制增长28.5%, 中外合资、合作经营和外资企业增长48.8%, 非国有工业增加值占全国新增工业增加值的61%, (6)其中股份制企业全国已有3700家, 约70家公司的股票公开上市, 1万家企业被兼并。(7)对外贸易进出口总额达到1656亿美元; 实际使用协议外资额为188亿美元, 实际获得的外商直接投资额为111.6亿美元; 注册的“三资企业”增加4.7万家, 总数达到8.4万家。(8)对外开放的范围和领域日益扩大, 新开放了5个沿江城市、18个省会城市、13个沿边城市, 增加了34个开放口岸。

目前经济特区在继续发展, 沿海开放城市、开放地带和经济开发区与高新技术开发区的发展速度在进一步加快, 一个对内对外经济大开放的新格局已基本形成。以浦东开发区为“龙头”的上海经济区将有力带动长江三角洲地带和整个长江沿岸地区经济的发展, 并对其他地区发展形成强大的辐射力和助推作用, 这对于促进中西部地区经济发展具有十分重要的意义。沿边城市与口岸的大开放既促进了边疆少数民族经济的发展和对外贸易的多样化, 也将带动内地经贸的发展。正在拟议中的有关在西北六省区建立“六大经济带”发展规划构想一旦能够付之实施, 那么它将大大加快西北地区的经济发展, 缩小东西部地区的发展差距。新的“三沿”战略(即沿海、沿江、沿边地区以开放促进发展的战略)标志着一个全方位的对外开放的新格局的形成, 它不仅将对我国国内各地区经济发展产生积极的促进作用, 而且将有力地推动我国与周边国家与地区的经济合作与发展, 并保持和进一步带动整个东亚地区经济贸易继续稳步增长的

强劲势头。值得注意的一点是，随着经济特区的发展和沿海地区的开放，台港澳经济与大陆经济的联系越来越紧密。据统计，到1992年底，台湾对大陆的协议投资金额为89.73亿美元；香港向内地实际投资达170亿美元，香港与内地的双边贸易总额；为6300亿港元，香港成为内地产品销往世界各地的最大的转口贸易基地。(9)前不久大陆与台湾举行的“汪辜会谈”将会为进一步加强两岸经济与文化交流开创一个新的局面。因此，大陆和台港澳经济关系的日益加强，将既有利于双方经济的相互发展和加速走向统一，也有利于推动东亚地区经济贸易的进一步发展与合作。同时，中国目前正在为恢复关贸总协定缔约国地位而不懈地努力，一旦重新“入关”，中国经济将逐步融入世界经济体系，成为其中的一个重要组成部分。

据有关方面的预计，1993年的经济增长率将达到10%左右。(10)今年是按照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目标进行改革的第一年，经济改革的主要内容是：以转换国有企业经营机制、转变政府经济管理职能为重点，围绕把企业推向市场这一中心环节，加快企业改革；以加快价格改革为契机，配套推进财税、金融和计划体制改革；大力发展市场体系，加快以进口管理体制为重点的外贸体制改革；全面推进社会保障制度和住房、土地使用制度改革；提高综合试点水平，做好新体制建设的基础性工作。

中国的改革开放先后经历了三个发展阶段。首先是从农业开始的，重点在于改革旧的农村经济管理体制，实行联产责任制，发展多种经营和乡镇村办企业，建立农工商综合服务体系；同时在南部沿海地区有选择地兴办经济特区，进行对外开放试验。在农村经济改革获得成功和特区对外开放取得了一定成就之后，从1984年起，转向改革开放的第二阶段。主要是对城市工业经济管理体制进行改革，

实行“承包经营责任制”，确立企业自主权；缩小国家指令性计划范围，进行市场调节；对不合理的价格、税收、外贸体制加以改革；进一步扩大对外开放，先后开放了14个沿海城市实施沿海地区发展战略。目前改革开放进入了第三阶段，这是一个以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系为基本目标进行全面彻底改革开放的极其重要的转折性阶段。建立市场经济、对经济体制进行全面改革；按各地不同情况特点推行新的地区发展战略；实行对内对外双向循环的全方位的大开放，积极参与国际经济竞争和地区经济合作，实现与世界经济体系基本接轨；是这一阶段改革开放的基本方向与目标。因此，90年代是实现经济体制转型、推动经济迅速增长、为21世纪中国经济迈入世界中等发达水平国家行列的关键性10年。

政治改革与社会稳定

中国改革开放之所以取得巨大的成就，很重要的一个原因是保持了政治与社会稳定。政治与社会的秩序和稳定，是“后发型”国家实现经济高速增长和现代化的先决条件，也是东亚国家与地区战后经济发展的基本经验，这是由东亚地区特殊的历史背景和面对的现实的国际环境所决定的。在稳定中求发展，在发展中实现和保持稳定，这是中国在实行改革开放、走向社会主义现代化过程中所得出的基本经验。

1978年底的中国共产党十一届三中全会为推行改革开放政策奠定了良好的政治基础，使中国进入了自建国以来政治与社会稳定时间相对较长的一个时期。改革开放时期的政治稳定与经济发展是一致共存的，并且在经济发展的过程中对政治体制进行相应的逐步稳妥的改革。我国的政治体制经历了这样一个过程：改革首先是从

共产党内开始的，即重新确立党内的“民主集中制”的原则和领导方法，真正维护党员的基本权利；禁止搞“个人崇拜”；废除领导干部职务终身制；实行党政分开，改变以党代政、兼职过多、权力过份集中的不合理现象；大胆选拔年青干部，实现新老交替；反对官僚主义作风；在意识形态、思想方法上，提倡实事求是、解放思想、一切从中国的国情和实际问题而不是仅从马克思主义书本或教条出发，强调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随后又将改革逐步扩大到社会领域，重新调整党、国家和社会的关系。实行与民主党派“共存、监督”的方针原则，健全社会主义政治协商制度，充分发挥它们在参政、议政上的积极作用；启用大批经济、技术专家和社会科学家，朝着决策科学化、民主化的方向迈进；进一步完善人民代表大会制度，切实保障公民的基本权利。第三是加强法制建设和执法监督，以在法治原则的基础上确保经济改革、对外开放的顺利进行，以及政治的稳定和社会秩序的安定。据统计，1987—1992年，全国人大及其常委会先后通过了包括宪法修正案在内的87个法律议案。其中经济方面的法律21个，有全民所有制工业企业法、中外合作经营企业法、外商投资和外国企业所得税法、海商法等，并修改、补充和完善了民事诉讼法、中外合资经营企业、专利、商标法等；还制定了集会游行示威法、工会法、行政诉讼法和著作权法等；(11)另外还作出了加强社会治安综合治理等有关决定。第四是对行政管理体制进行改革，调整和精简重叠、臃肿的政府机构，以提高行政效率。1982年和1988年曾先后进行过两次政府行政机构的精简与合并，虽然结果不是很理想，但是它朝着对行政管理体制进行全面的改革迈出了重要的一步。五是舆论监督的作用在逐步增大，鼓励发表有利于促进社会经济、政治、文化发展的各种看法和不同言论包括批评意见；

并采取一些措施对各级政府的工作进行监督，惩治贪污腐败行为。经过十多年的改革，过去那种权力集于一人、社会政治、经济、文化权力完全集中于中央的高度集权的传统政治体制已基本改变，政治的稳定性得到提高，政策的制定与变化的可预测性增大，政策的连续性增强。

随着经济体制改革进入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和逐步融入世界经济体系阶段，政治体制方面也将进行相应的改革。政治体制改革的原则是适应经济体制改革和经济发展的要求，将民主化和法制化紧密结合起来。民主与法制是政治现代化基质。改革的方向是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民主政治，而不是西方的多党制和议会制。所谓建立中国特色的社会主义民主政治，有这样几个基本点：民主集中制、人民代表大会制度、多党合作与政治协商制度、民族区域自治制度、民主的科学的决策制度、基层民主管理制度和以传播媒介、监督机关和行政检察机关为主的监督制度。改革的目的按邓小平的话来说就是：第一，巩固社会主义制度；第二，发展社会主义生产力；第三，发扬社会主义民主，调动广大人民的积极性。改革的长远目标是：建立高度民主、法制完备、富有效率、充满活力的社会主义政治体制。

改革政府机构、转变政府对经济的管理职能是当前政治体制改革的重点，目标是改变政府与企业的行政隶属关系，还权于企业；明确国有企业产权关系，实行政企分开；把企业推向市场、展开竞争；而政府的主要职责和任务是统筹规划、制定政策、组织协调、提供服务、强化审计和监督，进行间接的宏观调控。另一方面，在展开上述改革之后，还将会对政府决策与行政机制进行逐渐改革，即在法制基础上使政府公共政策决策体制优化、政府活动过程、行政

程序合理化；推行以公务员制为核心的政府机构人事制度改革，提高政府工作人员的素质与效率。

从中国政治体制改革的进程来看，其特点首先是从维护政治与社会稳定和适应经济体制改革和经济发展需要两大角度出发，采取调整、试点和部分改革的渐进稳妥的方式来推进和扩大政治体制改革的范围。由于在旧体制中政治、经济、文化、思想相互之间的关系有很强的连带性，牵涉到各方、各个层面上的各种复杂的利益关系。因此，政治改革不能急于求成、无法一蹴而就。而政治体制改革今后能否顺利地进行下去、取得成功，很重要的一点是，它将取决于向市场经济体制转型的改革成效如何、经济是否能够稳定地发展以及对外开放的国际经济与政治环境是否有利。

问题与展望

在过去的14年里，中国经济、政治改革与对外开放取得了相当大的成就。邓小平南巡讲话之后，一方面中国经济出现了前所未有的高速增长势头，尤其是各地区发展的规模、速度加大加快；另一方面在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这一基本目标之下展开对经济体制进行全面而又根本性的改革，政治体制改革也将伴之而行。然而在经济、政治改革与发展过程中，一些多年存在的问题由于经济高速增长以及向市场经济转轨而越来越突出。

农业增长缓慢、基础工业落后、经济增长与通货膨胀之间的矛盾、国有大中型企业改革所面临的困难、地区发展不平衡、贫富不均、以及参与国际经济体系面临的困难等，是目前经济发展所面临的基本的问题。其中，最主要的问题是，通货膨胀、贫富不均、地区发展不平衡与基础工业落后的问题。

国内外人士对目前中国经济是否“过热”从而可能会导致经济再一次出现大波动和社会不稳定表示担心。眼下人们最为关心的是经济高速增长引起的通货膨胀问题。一方面经济发展速度在继续加快，今年第一季度与去年同期相比，国民生产总值和工业生产分别增长14.1%和22.4%；另一方面通货膨胀急剧上升，与去年同期相比，平均零售物价指数上升8.6%，突破了今年的计划控制指标，其中35个大中城市的生活费用指数增长15.7%，有的已经超过20%。(12)造成通货膨胀急剧上升的直接原因，在于固定资产投资规模和信贷规模过于膨胀，货币超量发行。而最根本的原因还是在于，中国经济仍是一种“短缺经济”，因而是一种不易控制的自发冲动力很大的“数量扩张型”经济，即以资金的高投入来刺激和维持产值的高增长，能源、原材料和劳动力消耗大，经济效益则不高。目前经济正是在通货膨胀率上升、低利率和人民币贬值的状况下运行和增长的，其结果势必将会导致高速度和低效益。最近采取了一些应急的宏观政策上的解决措施，如提高银行储蓄贷款利率、控制货币投放和信贷规模、调整产业投资方向等，并已产生了一些积极的效果。现在的经济发展状况与1987、1988年大不相同，我们已有改革开放14年的经验教训，有能力加强和改善宏观调控，防止因宏观经济失衡对经济的长期增长和社会安定造成不利影响，从而为改革开放创造更加有利的环境。要从根本上解决经济增长与通货膨胀的关系问题，就必须加快从计划经济向市场经济转变的步伐，改革金融货币体制和政府财税体制。要解决通货膨胀问题，制定和执行合理、稳定、严格的货币政策是最关键的。

在政治方面，最高领导层的权力交接、贪污腐败、中央与地方的关系以及政府的权威等，是实现政治经济体制有序稳步转变和建

立新体制过程中所面临的基本问题。

关于民主化问题。国外有些中国问题观察家称，中国走向市场经济的“自由化”政策，必将导致政治“自由化”和“民主化”。一些国家还在所谓的民主与人权问题上向中国施加政治和经济压力。中国政治的未来发展方向就是建立社会主义民主政治，而不是西方“三权分立”式的议会民主政治。从现代化理论和战后发展中国家政治变革进程的经验教训来看，民主社会的形成与发展除了需要经济相当程度的发展、法制基本建立、社会阶层流动和利益多样化等一般条件外，还必须考虑到每个国家各自特殊的国情和历史实际。因此，民主政治体制和形式是不能照搬的。对于中国来说，它有着与其它国家不同的特点，主要表现在中国是一个社会主义的发展中大国；共产党的执政地位是任何一种政治力量所无法取代的；正处在现代化起飞发展阶段，各个地区经济发展不平衡、差异比较大；法制尚不完善；政治与文化的统一是一个极其重要的历史遗产；还是一个多民族的国家；有过近代以来一百多年陷于外侵、内乱、分裂的痛苦经历；等等。中国的民主建设必须从自己的特点与实际出发。从东亚国家与地区政治现代化发展的历程来看，情况也是这样。如果说西方民主政治发展模式是从议会制度或“三权分立”体制走向大众参与，那么东方国家的政治现代化的发展模式则可能从民众普遍参与逐渐有序稳步地走向民主社会，而且民主的体制与形式必定与西方有所不同，日本就是一个很好的例子。因此，民主的发展不能操之过急。另一方面，从苏联解体、东欧国家的变革、东亚地区的发展历程，拉美的民主化运动和我国14年的改革开放经验教训，也可以看到，没有现代经济的持续稳定的增长，现代政治的充分发展是不可能的，甚至还有可能使政治发展出现停滞和倒退，这在世界上的

一些国家和地区已经为所见了。只有经济稳定迅速地增长，才能形成更为强大的政治改革的共识和动力，社会主义民主政治才有希望实现。贫穷不可能实现民主的，而且也无法使民主政治继续生序下去。因此，现代经济的发展与停滞直接关系到社会主义民主政治的前途和命运。当然，诚如经济改革与政治改革何者为先，取决于各国的历史与现实一样，民主的发展方式也应根据各国的实际情况来加以推行。

除经济与政治方面存在的问题之外，中国对外政策的未来前景也引起人们的密切关注。最近国际货币基金组织(IMF)在对中国目前经济发展进行评估时，改变了以前的以美元汇率为基础的计算方式，而采用了购买力平价的计算方式，得出的结果称，中国的国民总产值(GNP)不是原先的4300—4400亿美元，而是1.6—1.7万亿美元，中国目前的经济实力与规模仅次于美国和日本，已成为世界第三经济大国。(13)世界银行最近也发表了类似的报告。一些外国报刊对此宣称，随着中国经济力量的日益强大，未来将对亚太地区国家和国际安全构成威胁，即所谓的“中国威胁论”，似乎从一年多前对苏联解体是否会在中国重演的担心转为对中国未来强大的恐惧。14年的改革开放的确使中国经济得到了巨大的发展，但是，对于一个幅员辽阔、人口众多、地区发展还很不平衡的中国来说，仍然处在求发展的阶段，国民生产总值的人均水平还很低，与发达国家的发展水平还有较大的一段差距。1993年中国的军费预算仅为73亿美元，是美国今年军费2743亿美元的2.66%，按人均计算也只有6美元，而美国则为1100美元。(14)目前中国的军事战略与军事态势仍然是防御性的，虽具有威慑性，但不对任何一个国家构成进攻性的威胁，而且中国在国外既没有驻军也没有任何军事基地。中国对外政策几十

年来所一直坚持的一个基本点，就是反对霸权主义。中国现在不称霸，今后经济发展了也不会称霸，对中国强大的恐惧和担心是完全不必要的。另一方面，中国现在正全力以赴地从事国内经济建设，实现向市场经济体制转变，以及进一步扩大对外开放、参与国际经济合作，实现与世界经济体系基本接轨。这一切决定了中国比以往任何时候更需要与周边国家和睦相处与合作发展，并且与全球性大国建立和维持一种稳定、协调的正常关系，有一个有利于国内经济发展的和平合作的国际环境。因此，改革开放时代灵活务实的中国对外政策有这样几个基本点：坚持独立自主与和平共处五项基本原则；奉行和平外交，反对霸权主义；不结盟，站在第三世界、发展中国家一边，加强彼此的团结与合作；着重发展和巩固与周边地区和邻国友好合作关系；推行全方位外交，努力与世界各国建立友好合作关系；反对军备竞赛，实现有效的裁军和军控；主张通过国际协商与和平谈判等政治外交方式解决国际与地区冲突纠纷问题；谋求建立一个和平、稳定、公正、合理的国际政治新秩序和平等互利的国际经济新秩序。

结语

改革开放不仅使中国国内的政治、经济、文化和社会生活发生了巨大的变化，而且对亚太地区和世界经济与政治的发展趋势产生了深刻的影响。随著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与政治体制改革的逐步展开和深入，这种变化和影响必将进一步加速与扩大。它将有助于中国的对外开放，更好地发展与亚太地区周边国家各种关系，并在全球事务中发挥更重要的作用，也有利于维护和发展东北亚区域的和平、稳定与合作。

注释：

- (1) 《人民日报》，1993年5月14日。
- (2) 《经济体制改革十年》，国家经济体制改革委员会编，1988年出版。
- (3) 《重大战略决策—加快发展第三产业》(上下卷)，中国政法大学出版社。
- (4) 同(2)。
- (5) 《人民日报》，1993年4月2日，1993年4月4日。
- (6) “国家统计局199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统计公报”。
- (7) 同(1)。
- (8) 同(6)。
- (9) 据香港政府贸易署、海关和中国对外经济贸易合作部台港澳司的统计材料
- (10) 《人民日报》，1993年4月5日。
- (11) 香港《经济导报》，1993年5月24日；《人民日报》，1993年5月8日。
- (12) “Economist”，Nov. 28, 1992.
“Time”，April 12, 199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April 27, 1993.
“Time”，May 10, 1993.
“Business Week”，May 17, 1993.
“The New York Times” May 20, 1993.
“Time”，May 31, 1993.
- (13) 《人民日报》，1993年5月24日。

빈 면

中国的对外开放与东亚经济

亚州太平洋研究项目主任 陈 庄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所

—

自1978年中国实行对外开放以来, 已经历15个年头。实践证明, 在当今世界经济相互依靠, 相互合作和相互竞争趋势愈益明显的形势下, 中国摒弃长期实行的封闭型经济发展模式, 打开国门, 大踏步走向国际市场, 不仅是中国经济振兴的必由之路, 而且对亚太经济, 尤其是东亚经济的长期繁荣具有深远意义。10多年来, 中国在建立开放型经济体制方面, 主要抓了以下环节:

(一)构筑全国多层次、全方位的开放格局。1979年国务院确定在东、福建两省实行特殊政策, 并在深圳、珠海、汕头、厦门试办经济特区。之后又先后决定开放沿海14个港口城市, 开放长江三角洲、珠江三角洲、闽东南地区、山东半岛、辽东半岛、环渤海湾地带等。经过10多年的努力, 已初步形成经济特区——沿海开放城市——沿海开放地带的沿海地区对外开放格局。去年以来中国的对外开放又进入一个新阶段。1992年中国政府陆续批准长江沿岸28市、8地区, 东北和西南地区13个边境城市以及内陆地区11个省会城市对外开放。这意味着中国的对外开放已由沿海向沿江、沿境(边境)和内陆全方位发展, 它必将大大推动中国的现代化建设。

(二)改革外贸体制及相关制度，加速国内市场与国际市场接轨。1978年以来，与中国经济体制改革相适应，原有外贸管理体制逐步得到改革，特别是从1988年开始的两次重大改革，使外贸体制发生了根本性变化。一是在外贸企业中普遍推行承包经营责任制，打破垄断体制，实行经营权下放。二是通过调整汇率，统一外汇留成等措施，取消了对外贸企业的出口补贴，使外贸企业开始走了自负盈亏、自主经营、自我发展和自我约束的道路。在确立新的对外贸易体制的同时，中国还对若干相关制度作出修正，使之尽快向国际惯例靠拢。例如推行国际质量保证标准，建立国际通用的商标制度等等。最近中国人民银行又参照《巴塞尔协议》等国际通用的做法，推准了《外汇业务管理规定》和《非金融机构外汇业务管理规定》，以适应市场经济和对外开放的需要。

(三)在振兴出口的同时，逐步开放国内市场，努力为外商来华进行经贸活动创造良好条件。首先中国业已取消进出口指令性计划和进口调节税，大幅度减少了配额和许可证管理的商品。今后两年内还将取消三分之二以上的进口许可证，其它非关税措施也将大幅度减少。其次是逐步降低关税。现已两次降低3300多种进口关税，使关税总水平下降7.3%。第三、取消全部(1751种)进口取代商品清单，加快了汇率制度的改革。第四，将对外开放行业由工业、农业逐步扩大到金融、保险、商业、旅游、交通运输等领域，外商在这些部门的投资不断增长。此外，为了保证外贸的顺利进行，中国正加紧外贸立法工作，增强外贸政策、法规的透明度。迄今为止，中国政府已公布47个有关贸易规章制度的文件。

二

对外开放给中国的现代化建设以新的活力。80年代中国经济的腾飞，特别是近年来的高速增长引起了世界的广泛关注。目前中国尽管还是一个发展中国家，在前进的道路上仍有不少困难和问题，但经过15年的努力奋斗，中国的经济面貌已经发生深刻的变化。它与世界经济的联系大大加强，并且正在成为国际经济体系中日益重要的组成部分。就东亚地区而言，中国的经济影响主要表现在：

（一）中国的经济状况关系到东亚经济全局的稳定。中国领土辽阔，人口众多，二者分别占东亚的73%和68%。因此，中国经济的走向如何，社会是否稳定，不可能不对本地区产生直接或间接的影响。自1978年实行改革开放以来，中国经济基本维持良好发展势头，80年代的实际经济增长率达到8.9%。之后因经济调整，发展速度有所放慢，但从去年起，经济再次出现高速增长的态势，实际增长率达12.8%的高水平。随着经济发展，人民收入快速增长，城镇居民人均生活费收入已由1978年的316元提高到92年的1826元，增长4.8倍；农村居民人均纯收入也由同期的134134元上升到784元，增加4.1倍；农村居民人均纯收入也由同期的134元上升到784元，增加4.1倍。就总体而言，人民生活已开始从“温饱型”向“小康型”过渡，部分沿海地区则已达到或接近小康水平。在占世界人口近四分之一的中国，能初步做到人民安居乐业，既是造福中国人民的一大创举，又是对世界，特别是对东亚地区的经济发展和政治稳定所作的积极贡献。

（二）中国国内需求的增长，扩大了东亚地区的商品销售市场。按人均进口额计算，目前中国的市场容量在东亚地区仍然是最低的，但

潜力很大，并且随着经济发展和人民生活水平的提高，这种潜在性正在迅速转变为现实性。1978年中国进口额只有109亿美元，而1992年已猛增到806亿美元，14年间增长6.4倍，增幅之大，在东亚地区名列前茅。据日本经济研究中心的长期预测，到公元2000年，中国的进口贸易额将达2051亿美元。从80年代及近年中国对外贸易的发展情况看，这一预测有可能实现。首先，到本世纪末，中国将继续维持年均8%至9%的经济增长速度，国内基本建设投资进一步扩大，包括工业原材料和机械设备在内的生产资料的进口将达到较高水平。其次，随着人民收入提高，消费需求日趋旺盛。1978年中国全国居民消费水平为175元，1990年上升到714元，增长了3倍。鉴于中国的特殊情况，在私人消费中住宅和医疗所占比重很小(1990年仅占8.4%)，这就使居民收入可以更多地用于其它消费。从80年代后期起，居民消费取向开始向中高档产品倾斜，包括食品、服装、家用电器在内的外国商品十分畅销。第三，中国正在加紧为恢复关贸总协定缔约国地位作准备，“复关”后中国市场的开放度将大为提高，国外产品将更容易进入中国市场。

(三)努力吸收外资，中国已成为东亚重要“生产基地”之一。自实施对外开放以来，中国采取一系列政策、措施，积极为外商来华投资创造良好环境，取得显著成效。1979至83年，中国吸收的外商直接投资的实际使用额总共才18亿美元，而到1992年底累计已达345亿美元，其中仅去年一年吸收的投资额即占累计额的近三分之一。截止1991年底，已投产的外商投资企业达1.7万家，其中生产型企业占85%左右。大量外资企业进入中国，有力地推动了中国经济，尤其是沿海地区的经济发展。以引进外资最多的广东省为例，1979至91年其年均实际经济增长率为12.4%，工业生产增长速度更高达20%

以上。1992年5个经济特区和14个沿海开放城市的出口额已达288亿美元，占出口总额的34%。特别引人注目的是，“三资”（中外合资，中外合作，外商独资）企业的出口贸易增长迅速，1992年达174亿美元，比上年猛增44%，它在中国出口总额中所占比重也由91年的16.8%上升到20.4%。它不仅意味着外资企业在中国经济中的重要地位，而且也说明中国作为东亚一个新的“生产基地”已崭露头角，其作用正日益为外商所重视。

（四）中国经济的“国际化”开始起步，经济合作领域不断扩大。由于受经济发展水平等因素的制约，长期以来中国对外经济活动侧重于贸易往来，对外开放后，其它合作领域也有较大发展。在积极引进外国资本、技术和管理经验的同时，注意为“走出国门”创造条件，逐步使经济合作模式由“接受型”向“互动型”转变。主要表现在，第一，对外承包工程和劳务合作稳步发展。1979至92年6月底，累计签订对外承包工程和劳务合作合同额220亿美元，完成营业额130亿美元。92年6月底在国外执行合同的人员达10万人左右。第二，中国企业开始走向世界。1979至90年间，中国企业在境外举办的非贸易性企业共801家，总投资为24亿美元，其中中方投资为10.3亿美元，占43%。尽管投资的总体规模还很小，但意义重大。它标志着中国企业已向跨国经营迈出了可喜的第一步。第三，技术出口增多，技术合作的双向性加强。1990年中国技术引进合同额为12.7亿美元，同期技术出口合同额为9.5亿美元，技术贸易日趋平衡。从技术贸易的地区结构看，中国技术进口主要来自发达国家，而技术出口则集中于发展中国家。

三

80年代亚太经济，特别是东亚经济，取得长足发展，为中国的对外开放提供了较好的外部条件。90年代东亚经济虽然面临诸多问题和困难，但从各种基本因素看，仍有可能保持较高的增长速度。据日本野村综合研究所的预测，90年代除日本外，其它东亚国家(地区)的平均增长率可达7.9%，基本与80年代(8.0%)持平。这就是说，从总体看，90年代中国所处的周边经济环境，还是比较好的。当前摆在中国面前的迫切任务是，一方面加强对外开放的力度，继续抓好与国际经济接轨的各项工作，建立健全，完善的开放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另一方面努力发展与周边国家(地区)的关系，维持东亚地区良好的经济发展势头，构筑对外开放与东亚经济发展互动的良性循环机制。这不仅有利于中国自身的现代化建设，而且对本地区的经济长期繁荣也具有重要意义。

(一)努力维持东亚地区的政治稳定，争取和平安宁的周边环境。10多年来中国经济发展确实很快，但从国民经济整体素质和综合国力看，还存在不少问题。若按人均国民生产总值计算，1992年中国才360多美元，在东亚各国(地区)中处于最低水平。因此振兴经济，提高人民生活仍然是中国面临的一项首要的长期课题。特别是到本世纪末中国要实现国民生产总值翻两番的目标，争取和平安宁的周边环境至关重要。而要做到这一点，最根本的，就是必须维持东亚地区政治形势的稳定，防止地区冲突的发生。目前中国同周边国家的关系处于全方位的良好状态。今后中国将继续坚定不移地奉行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在和平共处五项原则的基础上，积极发展

同周边国家的睦邻友好关系。

(二)在平等互利原则下,进一步加强与东亚各国(地区)的经济合作。80年代东亚经济得以实现高速增长的一个重要因素是,各国(地区)间存在较强的经济互补性。中国资源丰富,劳动力充足,国内市场潜力很大,且有相当的科学技术基础和较为完整的工业体系,特别在劳动密集型产业领域,有着与国外开展经济合作的广阔前景。随着对外开放步伐的加快,预计90年代中国同东亚的经济合作,无论在深度还是在广度上都会有进一步的提高。就中韩经贸关系而言,建交前的民间往来已为此奠定了良好基础。1992年双边贸易额达82亿美元,比90年增长1.2倍。截止1992年韩国对华直接投资总额已达4.88亿美元,兴办企业共434家,其中仅92年建立的就占总数的近60%。去年8月中韩建交标志着两国关系进入一个新的发展时期,它必将大大推动双边经济合作的展开。据韩国驻华常设贸易馆负责人的预测,到1995年,中韩贸易额将突破200亿美元大关,同期韩国将继日、美之后成为中国的三大经济合作伙伴。

(三)中国愿意与东亚各国(地区)一起,为建立国际经济新秩序,尤其是包括东亚地区在内的亚太经济新秩序而努力。鉴于战后的历史教训,我们认为未来的国际经济新秩序必须是公平、合理、平等和互利的,应该与旧的国际经济秩序有本质的区别。亚太地区存在着政治、经济、社会、文化形态的多样性,各种关系错综复杂,在建立经济新秩序方面会有一些的难度,但也必须遵循上述原则。具体地说,就是:第一,区内各国人民有权根据本国的具体情况,选择自己的社会制度和发展道路。第二、区内国家无论大小,强弱、贫富,都应当作为国际社会的平等成员参与本地区的经济事务。第三,区内经济发达国家应当在资金,特别在技术上给发展中国家(包

括新兴工业化国家和地区)更多的支援,以缩小与它们的经济差距,实现本地区的共同繁荣。第四,区内各国之间出现的经济矛盾和摩擦,应当通过协商来解决。必须防止贸易保护主义的抬头,努力维持本地区的开放型经济合作体制。在这方面,区内经济发达国家负有更大的责任。当然,一种新的经济秩序的形成,不可能一蹴而就,需要经历长期乃至曲折的过程,但我们相信,只要区内各国人民通力合作,不懈努力,这一目标是一定能够实现的。

当前朝鲜半岛形势及展望

東亞研究室 助理研究員 程 玉 洁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随着美苏两极战略格局的终结，世界朝着多极化方向发展，各种力量正在进行新的分化组合，世界形势由对立趋向对话。有关大国根据新的战略考虑对其内外政策做以相应调整，以力争在未来的世界战略格局中占据有利地位。对利害交叉，关系纵横交错的朝鲜半岛，均力图维护并扩大自己的影响，但同时，又都希望维护朝鲜半岛的相对稳定局面及缓和势头。南北朝鲜在相互对峙了40多年后，又坐下来对话，共商民族统一之大业，朝鲜半岛出现前所未有的和解局面。但去年10月以来，围绕对朝鲜进行核调查问题所发生的一系列情况，使朝鲜半岛局势再次成为世人关注的热点。

一、朝鲜半岛及周边形势现状

苏联、东欧剧变，使第二次世界大战后形成并维持的美苏对抗的冷战时代宣告终结。世界处于一个新的变化和过渡时期。在这世界性的大动荡、大变革中，朝鲜半岛形势和周边大国的内外政策亦随之发生很大变化，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

(一)大国之间由军事对抗转向致力于国内经济。冷战结束后，大国之间的军事对抗下降，各国开始把注意力放在国内经济问题上。美

国新总统克林顿当选后多次提出要把经济摆在国家安全的首位，强调外交要为振兴经济，重建美国服务。为此制定种种措施，以加强国际竞争能力，继续保持在国际事务中的主导地位。日本虽一直急于谋求政治大国地位，但其经济自1991年以来一直不很景气。因此，不得不把注意力放在国内问题上，以促使经济尽快走出低谷。作为前苏联继承者的俄罗斯，由于国内政局动荡，经济凋敝混乱，其地位与作用已大不如前：现在正在积极寻求经济援助与合作，度过危机，实现经济转轨，以便将来重返国际舞台。中国正在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这些迹象表明，今后大国之间斗争的焦点将转为以经济为主的综合国力的竞争。

(二)许多国家处于领导人换代时期。以美国总统选举为标志，一批冷战时期的国家领导人正被适应新形势的新一代领导人所取代。去年11月，美国举行总统大选，前任总统布什结束其4年的总统生涯，向新总统克林顿移交了权力。自此美国开始了战后一代执政的新历史。1991年11月，宫泽喜一当选日本内阁首相取代其前任海部俊树。不久前，又宣布解散国会举行大选。

不久前，又宣布解散国会举行大选。苏联于1991年12月分裂为独联体，叶利钦出任俄罗斯首届总统。目前正处于宪法危机之中。中国两会选出江泽民为国家主席兼军委主席。韩国亦于1992年12月进行了总统选举，金泳三取代卢泰愚当选为韩国第43届总统，开创了“文人执政”的新纪元。一代领导人的上台意味着各国内外政策正在酝酿着新的变化和过渡。

(三)各方关系发生很大变化。苏联解体后，世界向多极化发展，在此形势下，各国之间的关系发生很大变化，各种力量正在重新进行分化组合。西方国家围绕争夺世界事务领导权和维护本国利益的

矛盾与斗争明显突出，日德在走向政治大国的道路上迈出了新的步伐公开谋求成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美、日、欧大有三足鼎立之势。与此同时，东欧各国和苏联继与韩建交，中国与韩国由民间贸易代表部发展为外交关系，不久韩越建交。朝日在相互对立了几十年后，终于坐到一起就建交问题先后进行了6轮会谈。朝美两国也就改善关系进行了多达33次的接触，目前接触地点已由第三国移到美国和朝鲜，级别也有所提高。在此期间，宫泽、叶利钦相继访美，杨尚昆访朝，卢泰愚出访苏、美、日，明仁天皇、叶利钦访华，江泽民，布什访日、克林顿不久将访韩等等。频繁的首脑外交表明，新的战略格局正在形成。四大国在朝鲜半岛虽利害交叉、关系错综复杂，但都希望维持朝鲜半岛的相对稳定局面和缓和势头。

（四）南北关系取得重大突破。周边形势的变化，推动了朝鲜半岛逐步趋向缓和，自二次世界大战后相互对峙了40多年的南北双方为了实现民族统一，都希望结束对抗走向对话与和解。自1989年起，南北双方先后进行了多种级别、各个方面的接触、谈判和交流。迄今，仅总理级会谈即达8次。特别是进入1991年以后，双方关系取得较大改善。当年9月，南北加入联合国，11月南北总理先后签署了《关于南北和解、互不侵犯和合作交流协议书》和《关于朝鲜半岛无核化共同宣言》。随后，依照协议成立了和解、经济合作与交流、社会文化合作与交流、军事、核控制等5个共同委员会，设立了板门店联络事务所。

随着政治关系的改善，双方的经济交流也逐渐起步。从1991年进行首次直接交易以来，交流规模逐年扩大，据不完全统计，到1992年双方的交流规模已达2.09亿美元，交流项目由1991年的200项增至261项。交流形式也采用间接贸易和直接贸易并举的办法。去年，韩

国大宇企业集团董事长金宇中访问平壤，已与北方商定在南浦建立轻工业出口加工区。近几年，南北双方都对图们江下游的开发和利用颇感兴趣，双方经济官员甚至就此问题进行过多次磋商。尤为引人注目的是去年7月，北方负责经济事务的副总理金达玄应邀访问汉城，商讨经济合作问题。自此韩国掀起一股“北方投资热”。截止到10月，南北方已就66个合资项目达成协议：当时韩国有关部门官员曾乐观认为不久的将来，朝鲜将成为韩国的主要贸易和投资伙伴。

二、存在的问题

然而，去年10月以后，朝鲜半岛形势出现较大反复。南北合资的66个项目无一进展，原定于去年12月21日在汉城举行的第9次南北总理会谈被取消，朝日建交会谈中断，朝美官方接触终止。阻碍朝鲜半岛和平统一进展的主要原因是，美国抓住朝鲜核调查问题大做文章。去年10月，美韩宣布，由于朝鲜不肯放弃开发核武器的努力，美韩将停止执行美军从南方撤离的第二阶段计划，并重新恢复1992年曾一度偃旗息鼓的“协作精神”军事演习。其实，早在去年1月上旬布什访韩时，就主张与韩国协调立场对朝鲜采取强硬态度，美国前驻韩国大使唐纳德·格雷格也曾表示，韩国应把注意力更多地放在解决核问题上。1991年11月，美国中央情报局局长盖茨宣称，朝鲜在“6个月内可制造出一枚原子弹”。

对此，金日成主席明确表示，朝鲜既无制造核武器的意图，也无制造核武器的能力。1991年12月与南方签署《关于朝鲜半岛无核化共同宣言》。1992年1月，朝鲜决定在国际核安全协议书上签字，并接受国际原子能机构的调查。从当年5月起，国际原子能机构先后对

朝鲜进行了6次核调查。调查结果表明，朝鲜的核技术尚处于低级阶段。但美国对这一结论仍表怀疑，敦促国际原子能机构于2月25日通过一项决议，要求朝鲜在一个月内作出答复，接受对其宁边地区进行特别调查，否则将采取经济制裁，甚至不惜动用武力。同时明确要求日本和韩国不得在朝鲜核问题解决之前改善与特的关系。在美国的强大压力下，3月12日，朝鲜政府宣布退出不扩散核武器条约。美国这一做法，导致了朝鲜半岛几年来取得的缓和局面出现曲折，推迟了朝鲜民族的和平统一进程，使朝鲜半岛上空再次蒙上阴云。

美国在朝鲜半岛缓和取得进展之时，抓住核问题不放，是出于以下考虑：(1)美国为了应付总统大选，要集中精力处理国内经济问题，无意在朝鲜半岛问题上分散精力。(2)担当失去在东北亚地区的主导权。卢泰愚上任后积极推进北方政策，希望任内在南北关系上也有所突破。在南北双方共同努力下，南北关系取得了前所未有的进展。但美国从其战略角度考虑，担心南北关系走得过急，会导致美国军事力量从朝鲜半岛及东北亚地区的撤离。因此，不希望看到朝鲜半岛形势发展过快。

从朝鲜方面看，先是与韩国签署了《关于朝鲜半岛无核化共同宣言》，之后又在国际核安全协议书上签了字，并先后6次接受了国际原子能机构的核调查，在核问题上已经向前迈出了三大步。这足以说明，其无意制造核武器的表态是有诚意的。而美国一味施压的作法是不能接受的。

在此关键时刻，克林顿和金泳三新政府一上台，做出的第一个反应即为恢复美韩协作军事演习，中断撤军等等，直至发出最后通牒式的限期接受特别核调查。从而使北方感到更加失望，而采取了退出不扩散核武器条约的作法。

最近一段时间，韩国政府多次表示“希望和平解决这一问题”，并愿意就北方提出的“检查南方美国核基地、停止美韩协作精神军事演习、尊重北方的社会主义制度”等条件同北方进行谈判等等。朝美之间经过几次对话也取得初步进展。

我们欢迎这一和解态度，真诚希望朝鲜半岛局势缓和、稳定，希望南方稳定、北方稳定、南北关系稳定、大国与南北关系稳定。在核问题上，中国一向反对核扩散，不希望看到朝鲜半岛拥有核武器，不论是南方的、北方的、还是外国的。对于国际原子能机构与朝鲜之间在核调查问题上出现的困难，中国主张有关各方通过磋商和对话求得妥善解决。我们不支持施加压力谋求解决问题的行法，也不赞成采取经济制裁甚至军事威胁手段。这样无益于问题的解决，只能使事态进一步扩大化、复杂化。

三、发展趋势

进入6月以来，美国和朝鲜就核问题已进行了4轮政府级会谈，6月11日，终于达成一个三项协议。双方保证不以武力相威胁，其中包括不使用核武器；维护无核化的朝鲜半岛的和平与安全，其中包括采取不偏不倚地运用全面的保障措施，相互尊重主权，不干涉内政；支持朝鲜半岛的和平统一。同时，朝鲜决定“暂停”退出不扩散核武器条约。这一进展受到国际社会的普遍欢迎和好评，是和平解决核问题的一个良好开端，有利于朝鲜半岛和亚太地区的形势向好的方向发展。

当然，这仅仅是向和平解决核问题迈出的第一步，实质性的问题尚有待于美国和朝鲜的进一步协商。从其发展前景看，有可能出

现两种结果：一种是美朝会谈成功，那么，朝鲜接受特别核调查、南北进行互查、美军撤出韩国、永久中止韩美联合军事演习、朝鲜与美、日等各方关系随之得以改善。另一种是美朝协商失败，美国和国际原子能机构对朝鲜采取强硬措施，朝鲜半岛形势势将再趋紧张。因此，核问题的协商结果究竟如何，除了当事国之间的协商与合作外，有关各方的共同努力亦十分必要。

第一，朝鲜半岛周边国家及有关各方应积极努力创造一个良好的周边环境。有关各方均应为核问题的解决发挥应有的作用，对北方采取理解与合作的态度，而不是敌视和孤立政策，如可通过区域内的经济合作，开展与北方的经济乃至政治交流，与北方建立一种正常的交流关系。

第二，朝鲜半岛能否成为无核区，关键在于美朝双方的协商，尤其是美国的态度和立场。美朝达成三项协议，并同意在平等和公正的基础上继续对话，这仅仅是向和平解决核问题迈出的第一步，但对北方进行特别核调查等具体问题尚待解决。我们认为，今后在解决核问题过程中，仍需要美朝之间的相互理解，特别是美国的态度尤为重要，如果美国富有诚意的话，应抓住朝美会谈这个机会，不施加压力，不采取强硬措施，而是本着解决问题的态度，与朝鲜进行和平协商，尽快找到双方的共同点并达成共识，使核问题最终得以和平解决。否则又回到原点，核问题势将再次出现反复和曲折。

第三，朝鲜半岛问题的解决最终取决于南北关系的进展。南北同属一个民族，朝鲜半岛问题理应由南北双方自己协商解决。在解决核问题方面，鉴于韩国目前的实际处境，应尽可能发挥自己的作用，用实际行动消除与北方的互不信任感，真心诚意地与北方进行政治、经济方面的交流，进一步推进南北关系的改善。这将大大有

益于核问题的和平解决。

结 论

对于总的形势发展，我们持审慎乐观的态度。目前各大国均致力于国内经济发展，希望维持周边地区的和平与稳定，不愿意事态进一步扩大化，这是促使事情向好的方向发展的一个十分重要而积极的因素。尽管核问题的解决将十分艰难曲折，但我们相信，只要各方充满诚意，相互给予理解，通过认真协商，核问题的解决不是没有希望的。为了核问题的和平解决，为了朝鲜半岛及东北亚地区的和平与稳定，希望我们各方均做出积极的努力。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 - 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 - 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 實相과 展望
- 91 - 03 北韓體制的 變化 : 現況과 展望
- 92 - 01 南北和解 · 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 - 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 - 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 92 - 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 - 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 現況과 展望
- 93 - 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 - 02 北韓 核問題 :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 - 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 - 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 - 03 美國聯邦制 研究 :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 - 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 - 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 - 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 - 11 在野統一案 研究

- 91 - 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 - 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 - 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 - 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 - 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 - 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 - 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 - 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 - 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 - 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 - 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 - 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 - 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 - 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 - 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 - 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 - 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 - 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 - 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
案
- 92 - 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 - 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 - 02 金日成著作 解題

〈統一情勢分析〉

- 91 - 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
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 - 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 - 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 - 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 - 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 - 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政策
- 91 - 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 - 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 - 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 - 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 - 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
響 分析
- 91 - 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
能性

- 91 - 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 - 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 - 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南· 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 - 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 - 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 - 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 - 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1992年 上半期
- 92 - 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 - 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開發代案 및 法 制度中心
- 93 - 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國民投票 結果를 中心 으로
- 93 - 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 - 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 - 04 「조국통일을 위한 10대 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世界主要事件日誌〉

- 91 - 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 - 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 - 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 - 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 - 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 - 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 - 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 - 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 - 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2 (1993)

〈資 料〉

92 - 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 - 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 - 01 藏書目錄：單行本 研究報告書

93 - 02 藏書目錄：特殊資料